

연례정보보고서 99

•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9~2000

통 일 연 구 원

## 서 문

1999년 동북아정세를 살펴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긴장관계가 북·미간의 협상에 의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북·일수교협상 재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대외지원과 경제상황 호조 등에 힘입어 1990년대 이후 지속되었던 최악의 경제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적 여건 개선에 힘입어 '강성대국'에 입각한 체제 건설과 김정일체제의 정치적 안정화에 최대의 역점을 두었다.

남북관계에서는 서해사태와 같은 군사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이 지속되었으며 사회·문화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이 이루어지는 등 남북교류·협력이 한층 구체화되는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대북지원과 이산가족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당국간 대화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2000년에는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진전이 추진되는 등 북한과 주변국과의 관계가 진전되고 이것이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해소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유리한 동북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북한은 체제안정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대내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제한적 개방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에서는 경제·사회분야의 교류·협력의 확대가 예상되며, 대북지원 등과 관련하여 남북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정세인식하에 이 연례보고서는 통일환경, 북한정세, 남북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함으로써 통일환경과 남북관계에 대한 포

괄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례보고서는 1999년의 정세 분석을 토대로 2000년의 정세를 전망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가 각계의 통일관련 기관 및 인사, 북한·통일학 연구자, 대학생, 일반 독자, 그리고 정책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본 연구원의 다수의 연구진들이 참여하였다. 그런 점에서 본 보고서는 통일연구원의 종합적 연구성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의 초고 작성에는 각 전문분야별로 본 연구원의 다수의 전문가 연구위원들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본 프로젝트의 팀장인 박종철 박사(선임연구위원), 박형중 박사(연구위원), 서재진 박사(선임연구위원), 신상진 실장(선임연구위원), 전현준 박사(선임연구위원), 조한범 박사(연구위원), 최수영 박사(연구위원), 송정호 연구원 등이 최종본을 작성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1999년 12월

통일연구원 원장

곽 태 환

# 목 차

요 약 .....	1
<b>I. 통일환경 .....</b>	<b>15</b>
1. 동북아정세 .....	15
가. 동북아 안보환경 .....	15
나. 동북아 4국의 상호관계 .....	19
2. 한국의 주요 대외관계 .....	37
가. 한·미관계 .....	37
나. 한·일관계 .....	40
다. 한·중관계 .....	43
라. 한·러관계 .....	46
<b>II. 북한정세 .....</b>	<b>51</b>
1. 대내정세 .....	51
가. 정치동향 .....	51
나. 경제동향 .....	55
다. 사회동향 .....	59
라. 군사동향 .....	63
2. 주요 대외관계 .....	66
가. 북·미관계 .....	66
나. 북·중관계 .....	70
다. 북·일관계 .....	73

라. 북·러관계 .....	76
3. 대남동향 .....	80
<b>III. 남북한 관계 .....</b>	<b>85</b>
1. 남북대화 .....	85
2. 4자회담 .....	89
3. 경수로사업 .....	91
4. 교류·협력분야 .....	95
가. 경제분야 .....	95
나. 사회문화분야 .....	103
5. 인도주의 사안 .....	109
가. 인권문제 .....	109
나. 대북지원 .....	112
다. 이산가족문제 .....	116
라. 미송환 국군포로 .....	119
6.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 관계 .....	121
<부록> 1999년도 주요 사건일지 .....	127

# 요약



## I. 통일환경

2000년 동북아에서 미국이 우세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일본·러시아가 역내에서 역할증대를 위해 경쟁할 것이다. 그러나 4국은 갈등 속에서도 경제협력과 안보대화를 통해 협력을 증대할 것이다.

한반도문제와 관련, 주변 4국은 한반도에서 긴장고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핵·미사일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할 것이다. 특히 미·북, 일·북관계가 진전될 것이므로, 2000년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환경이 남북화해·협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 1. 동북아정세: 경쟁과 협력의 병존

2000년에도 미·중·일·러가 동북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경쟁할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4국은 최고지도자들의 교환방문과 여러 유형의 안보대화를 통해 21세기 안정적인 지역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2000년 동북아에서 경쟁과 협력이 병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동북아에서 미·중·일·러간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미·일의 TMD 연구개발과 중국내 인권문제 및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으로 인하여 미·중, 일·중간 정치·안보적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총통 선거(3월) 이후 미국내에서 대만을 TMD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강력하게 제기될 것이며, 티벳문제와 중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강화하여 미·일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미·중, 일·중간 경제협력 확대와 4국간 양자 및 다자 군사안보대화는 지역질서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엘친 러시아 대통령의 방일, 10월 APEC 지도자회의시 4국 지도자간 접촉 등도 동북아정세의 안정요인이 될 것이다.

## 2. 한반도 통일환경: 주변국의 대북한관계 개선

2000년 주변 4국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예상되는데, 이는 북한의 체제불안의를 감소시킴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미국은 「페리보고서」에 제시된 대북 포괄적 접근에 입각, 북한 핵·미사일문제의 해결과 한반도냉전 종식을 위해 북한과 협상을 추진할 것이다. 일본은 미·북협상과 병행하여 대북 수교협상을 진행하면서 북한에게 식량을 지원할 것이다. 중국은 미·북 및 일·북관계 개선에 따른 영향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북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과도 정치·안보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러시아는 외무장관의 북한방문을 통해 북한과 '조·러친선선린협조조약'을 정식 체결하고, 대북 영향력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II. 북한정세

2000년 북한은 김정일정권의 안정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대내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내적으로 북한은 김정일체제 안정을 위해 당체제를 정비하고 경제회생을 위해 제한적 범위의 개방을 지속할 것이다.

대외적으로 북한은 체제위협요인 해소, 경제회복을 위한 자원 확

보,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을 위해 대외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대미·일 관계 개선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중·러 및 서방세계와의 관계 진전을 모색할 것이다.

대남차원에서 북한은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 당국간 대화, 경제협력,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선별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비난, 전통적인 통일전선전술 전개 등은 지속할 것이다.

## 1. 대내정세: 김정일정권 안정과 경제회복에 역점

### <정치동향>

2000년 북한은 김정일체제 공고화를 위해 각 분야에서의 '강성대국 건설'을 강조할 것이다. '애국·애족·애민'으로 대표되는 김정일사상이 더욱 정교화될 것이다. 북한은 21세기 비전 제시를 위해 제7차 당대회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북한은 당체제를 정비하고 당비서 보임을 비롯한 각급 당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제2의 천리마운동'을 통해 낡은 사상잔재 청산 및 부패관료 척결 등을 시도할 것이다.

### <경제동향>

2000년 북한은 경제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경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대외적으로 부분적인 개방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 북한은 자력갱생 논리에 입각하여 토지정리사업, 감자 증산 등을 통해 식량증산을 도모하는 한편, 에너지부문과 금속·기계 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우선 노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북한은 해외식량원조 획득 및 대외경제협력 확대를 위

해 노력할 것이며, 경제특구 활성화, 해외자본 유치설명회 개최 등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요인에 힘입어 북한경제는 1990년대의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동향>

2000년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일탈 증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주민의 사상이완 방지를 위해 북한은 사상교육 강화, 일탈자 색출을 위한 각종 통제장치 보완, 농민시장과 암시장에 대한 단속 증대, 중·북 국경지역 통제 강화 등을 실시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농장·기업소 등 경제부문과 교육·보건 등 공공부문 등에 대한 국가관리체제를 복원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북한경제상황의 호전, 남북경협으로 인한 외화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 및 계층에 대한 배급체계가 개선될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증가추세에 있던 사회일탈행위 및 탈북 사태 등 전반적인 사회해체 현상은 약화될 것이다.

### <군사동향>

2000년에도 북한의 '선군정치'적 군사우선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군사우선 정책으로 인해 군부의 상위 권력서열 유지, 군의 경제사회 분야 개입 등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재래식 무기 현대화, 군사력의 휴전선 전진배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대외관계 개선 및 남북경협 분위기를 조성 때문에, 의도적으로 군사도발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북한의 통상적인 대남 첩보 수집, NLL 무효화를 위한 시위 등과 관련하여 우발적인 군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 2. 대외동향: 경제회복과 고립탈피 위해 노력

2000년 북한은 체제위협요인 해소, 경제회복, 고립탈피 등에 유리한 대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선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진전을 통해 안보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경제지원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북·미 고위급회담이 개최되고,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것이다. 북한은 북·미 고위급회담이 진행되는 한 미사일을 추가발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미사일수출 중단에 대해 어떤 대가를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 미사일협상의 진전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체제보장과 대규모의 경제보상이 제공되지 않는 한, 북한이 미사일 연구·개발을 쉽사리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경제적 재원 획득을 위해 대일 수교교섭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대북 식량지원을 대가로 일본인치의 방일, 일본인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 협조 등 관계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북·일 수교협상은 관련 현안별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진행되고, 대북 경제적 보상금의 규모 및 제공시기 등이 논의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납치문제, 미사일문제 등이 양국관계 진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진전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고 대미 관계 진전과 균형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은 대북 지원 확대 및 협력관계 증진을 통해 북한의 대미 편향을 견제하려고 할 것이다. 2000년 중국과 북한 고위층의 상호방문을 통해 북·중간 우호·협력관계는 한층 긴밀해질 것이다.

북한은 북·러 신조약의 공식 조인을 계기로 한·소수교 이후 소원해

진 대러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것이며,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공산당 등 야당과의 관계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 현대화계획에 따라 러시아제 무기의 도입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해외투자 확보 및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EU 및 동남아국가들과의 관계 진전을 추진할 것이다.

### 3. 대남동향: '북한식 정경분리' 지속

2000년 북한은 대미·일관계 개선을 위한 여건조성과 실익확보 차원에서 남북대화를 일정수준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일회성 남북대화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남북대화의 전면 재개는 배제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금강산관광사업 등 경협을 점차 확대시키고, 대외 이미지 개선 효과와 대가성이 있는 분야의 공연예술 및 체육교류를 선별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한총련」 및 「범민련」의 합법적 활동보장, 남한의 총선을 이용한 대남정치공세 등 통일전선전술을 지속할 것이다.

## Ⅲ. 남북한관계

2000년 미·북 및 일·북관계 진전에 의한 북한의 대외 자신감 회복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따라서 상반기중 대북지원을 중심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관광사업과 합작투자를 중심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고 사회문

화분야에서도 교류·협력이 증대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동결 및 미사일발사 동결이 지속되는 한, 경수로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다. 4자회담에서 한반도평화체제 전환에 관한 획기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작은 성과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 1. 남북대화: 제한적 당국간 대화 가능

북한이 남한의 4월 총선 이전, 남한의 보수여론 무마, 남한의 총선 상황 이용 등을 위해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더라도 북한이 선결조건을 양보하지 않는 한, 고위급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2000년 상반기 대북 비료·농약 지원 등과 관련한 남북차관급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 대북지원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남북차관급회담은 4월 총선 이후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남한이 상호주의 원칙을 신중적으로 적용하고 비료·농약 등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경우, 대북지원과 연계하여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편지왕래, 시범적 상봉 등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추진에 의해 유리한 통일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김대중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 실현을 위해 남북최고위급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2. 4자회담: 작은 성과 예상

2000년에 4자회담의 진전은 대북 포괄적 접근에 관한 북·미고위급회담의 진전과 관련되어 있다. 북·미고위급회담이 개최되어 협상이

진행될 경우,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4자회담도 개최될 것이다. 그러나 북·미고위급회담이 개최되면, 북한이 4자회담에는 형식적으로 임하면서 주로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4자회담의 의제 및 접근방식에 대한 한·미와 북한의 상반된 입장은 회담진전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북·미회담과 연결하여 그들의 기존 입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자회담에서 작은 진전을 기대할 수도 있다.

### 3. 경수로사업: 본공사 본격화

2000년에는 경수로 본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이에 따라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발사 유예를 지속하는 한, 미국의 대북 중유지원이 안정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재원조달을 위한 한국 및 일본의 후속조치 이행, 송배전시설 추가건설, 운영요원 교육 등 기술적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4. 교류·협력분야: 민간 교류·협력 확대·심화

#### <경제교류·협력>

2000년 남북교역의 경우 위탁가공교역 및 비거래성교역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경수로 본공사의 시작, 금강산관광사업 및 대북 지원물자의 반출 증가로 인해 비거래성 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서해공단사업의 추진 가능성 등 경제협력사업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민간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생산설비 반출제한의 폐지 등 남한의 대북 경협활성화 조치가 경협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현대는 2000년부터 금강산지역에 스키장과 골프장, 호텔, 쇼핑센터 등을 포함한 종합관광단지 조성에 착수할 것이다. 또한 백두산 등 북한의 여타 지역으로 관광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사회문화 교류·협력>

2000년에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금강산 관광사업과 연계된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강산관광사업이 안정적 궤도에 진입함으로써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확산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벤트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다. 특히 통일농구대회의 지속, 현대의 평양체육관 건설 추진 등 체육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교류·협력의 확대에 의한 개방여파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류·협력의 속도를 조절하고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4. 인도주의 사안: 이산가족의 시범적 상봉 실현

2000년에는 남북차관급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의 돌파구가 열려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편지왕래, 시범적 상봉 등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당국간 합의에 의한 대규모 상봉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3국에서의 개별적 상봉은 지난 2년간에 이어 증가할 것이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이 증가할 것이다. 대북지원에 참여하는 민간 단체의 숫자가 증가할 것이며, 농업개발 및 보건의료 지원이 확대될 것이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및 민간단체들의 관심이 제고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남한내 출소공산주의자 송환에 대한 북한의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I. 통일환경

### 1. 동북아정세

#### 가. 동북아 안보환경

주변 4대국들은 21세기 역내에서 영향력 확대 경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미국·일본 대 중국·러시아 사이의 대립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의 안보동맹 강화를 통해 지역질서를 주도하려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역내에서도 우세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일·러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역국들의 경제회복과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 확대는 지역정세안정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 (1) '일초다강'(一超多强)의 지역질서 지속

1999년 4월 미국은 워싱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지도자회의를 개최하여 'NATO 신전략'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NATO 역외 지역에까지 NATO의 집단방위 역할을 확대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의 반대를 무릅쓰고 코소보내 주민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NATO를 동원하여 유고를 공습, 밀로세비치를 굴복시켰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형성해 가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 등의 미사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구축을 시도하고 있으며, 일본과 함께 '전역미사일방

어'(TMD)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5개국과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역내 안보질서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우세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일·러 등 지역 강대국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역 경제안정을 위해 위엔화 평가절하를 단행하지 않음으로써 역내 국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역내에서 미국의 우위에 대항하는 유일한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주변사태법안', '자위대법개정안' 및 '미·일 물품노동력 상호제공협정 개정안' 등 '미·일 신안보협력지침' 관련법안을 통과시켜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러시아는 내부 문제로 지역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강화하여 지역문제에 대한 발언권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 (2) 미·일 대 중·러 경쟁구도 조성

미국이 일본과 함께 TMD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국가주권보다 인권을 우선시 하는 대외정책을 채택하고,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동북아에서 미·일 대 중·러간의 대립구도가 조성되고 있다.

미·일은 TMD를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동시에 대만까지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일이 TMD를 개발하게 되면 중·러의 미사일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일본의 군사역할 증대를 유도하여 미·일에 의한 동아시아질서 지배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였다. 또한 미국이 대만을 TMD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이는 대만통일을 어렵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중·러는

1999년 8월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5개국 지도자회담과 12월 옐친 방중시 미·일의 TMD체제 구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유엔에서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ABM) 준수 결의안'을 통과시켜 미국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인권이 국가주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미·일의 국제정치관과 이를 '신간섭주의'로 간주하는 중·러의 국제정치관 사이의 대립도 1999년 동북아 안보정세를 규정하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미국은 대만 및 티벳문제 뿐만 아니라 발칸사태에도 적극 개입하여 미국적 가치관을 확산시키려 하였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지도부 상호 교환방문과 최고지도자간 직통전화를 가동하여 미국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대한 반대 태도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미국은 유엔을 통해서 보다는 NATO와 같은 집단안보기구와 양자동맹관계를 활용하여 국제안보문제를 다루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행동이라면서 비난하는 동시에, 유엔에 의해 국제안보문제가 다루어져야 하며 세계질서가 다극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중국과 러시아가 영토문제를 완전히 타결짓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양국이 초강대국인 미국에 의해서 국제질서가 주도되는 것을 공동으로 견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미·일 대 중·러간의 경쟁구도가 조성되고 있는 근본적 배경은 이들이 21세기 동북아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일과 중·러 사이에 조성되고 있는 경쟁구도는 냉전시대의 대립구도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이들 4국 모두가 대내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안정 유지와 상호 경제협력 확대에 공감하고 있다. 또한 이들 4국간에는 철저하게 국익에 입각하여 관계가 설정되고 있고, '경쟁속의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 (3)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국간 경제협력 심화

1998년에는 일부 지역국이 경제위기 상황에 처하였으나, 1999년에 들어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과거와 같은 급속한 경제 성장세를 보였다. 미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인 장기 경제호황을 구가하였고, 일본은 소비진작책을 통해 대내 경제활성화를 모색함으로써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정비하였다. 한국도 김대중 대통령의 영도 하에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6%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중국은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연간 경제성장 목표치로 제시하였던 7% 내외의 성장을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중국은 대담한 국유기업 개혁조치를 통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과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협상을 타결지었다. 이로써 2000년중으로 중국은 WTO 정식 회원국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러시아에서는 아직 경제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심각한 물자난이 재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역내 국가간 경제교류·협력 확대 추세도 1999년 동북아정세의 또 다른 특징으로 기록될 수 있다.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협력 논의가 지역국간에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역내 국가들의 경제회복으로 상호간 경제교역 규모가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중 경우에도 1998년 교역액이 전년도에 비해 20% 정도 감소되었으나, 1999년에는 1998년 대비 10%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을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있는데,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미·중간 협상이 타결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11월 아세안 비공식 지도자회담시 한·중·일 3국 정상은 동북아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동북아지역의 중추국가인 한·중·일 사이의 경제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도 시베리아내 천연가스전 공동 개발과 실크로드 복원 등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

미국과 일본이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것도 동북아지역 경제협력과 지역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발사를 자제하기로 한 대신, 미국과 일본은 대북 관계개선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고 식량원조 금지조치 해제를 공표하였다. 이로써 북한과 미·일간 경제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 문제로 인한 지역불안 조성 가능성은 감소될 전망이다.

## 나. 동북아 4국의 상호관계

### (1) 미·일관계

1999년 미·일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하고 대북 공조체제를 강화하였다. 1996년 4월 ‘미·일 안전보장 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동맹’(Japan-U.S. Joint Declaration on security - Alliance for the 21st Century)이 발표되었고, 그 후속조치로서 1997년 9월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1999년 5월 일본은 유사법제를 정비하였다.

유사법제의 정비는 한반도를 비롯한 일본 주변지역에서 급변사태가 발발하였을 경우 일본이 미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토지사용, 물자 수송 및 인력 동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미·일 양국은 1997년 9월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제2차 중간보고서를 공표한 후 유사법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였다. 일본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진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1999년 1월 자민·자유당 보수 연합정권 등장 이후 유사법제 정비작업이 급진전을 보게 되었다.

자민·자유당 연립여당은 야당인 공명당과의 정책연대 아래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노동력 상호제공 협정(ACSA) 개정안’을 중의원(4.27)과 참의원(5.24)에서 차례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일본 자위대는 일본 주변지역 급변사태시 주일 미군에 대한 병참지원 등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40개의 항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미·일이 지역안보를 위해 역할분담을 강화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일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북한 미사일문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1999년 6월 북한이 또 다시 ‘대포동 2호’ 중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일은 한국과 함께 공조체제를 강화하면서 대북 강경자세를 보였다. 일본은 일본열도 전역이 사정권에 놓여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일본은 G-8(선진 7개국 + 러시아)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깊이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아세안지역포럼」(ARF) ‘의장성명’(7.26)에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이 표명되도록 하였다.

미국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미·일 3개국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추가 발사할 경우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 및 안정에는 물론 북한에게도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7.27)하였다. 코언 국방장관은 일본 방문시(7.28) 오부치 일본 총리와의 면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국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하면서 베를린에서 북한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재발사 유예를 약속받았다.

요컨대, 1999년 미·일은 일본의 유사법제 정비를 통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하였고,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과

공조체제를 강화하였다.

2000년에도 미·일은 한반도 급변사태 및 주변사태에 대비한 전략적 역할분담을 강화하면서 전략적 상호의존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갈 것이다. 일본의 대북 국교정상화 정책도 북·미관계 진전 추이와 연계되어 추진될 것이다.

## (2) 미·중관계

1999년은 미·중수교 2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였으나, 중국내 인권문제, 대만문제, 유고주재 중국대사관 폭격사건 및 '콕스보고서' 공개 등으로 인하여 미국과 중국간 정치·안보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미국이 유럽에서 NATO 신전략 개념을 도입하고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공동으로 '전략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여 중국 봉쇄를 기도하고 있다고 중국이 인식함으로써 미·중간의 대립이 고조되었다.

1995년 이후 처음으로 미·중간 인권대화가 개최(1.11~12)되었으나, 중국내 인권문제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미국 무부는 티벳 망명정부와 중국정부간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티벳문제 특별조정관을 임명(1.20)하였으며, 「1998 세계인권보고서」를 발표(2.26)하여 중국내 인권상황을 공개 비난하였다.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방중시(3.1)에도 미국은 중국정부의 반체제 인사 탄압에 유감을 표시하였다. 더욱이 미국은 유엔인권위원회에 '중국 인권상황 결의초안'을 제출하여 중국에게 인권개선을 요구하였다.

중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압력은 보다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2월 미 의회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중국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중국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5월에는 6.4 천안문사건 10주년을 앞두고 중국정부에게 6.4사건 조사특위 구성과 6.4사건 재평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미국정부에 7월 10일을 '세계 티벳의 날'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미 하원의 결의안 제출(7.8)도 특기할 만한 사건이다.

중국은 미국의 인권압력을 중국내정에 대한 간섭행위로 간주하는 한편, 중국의 경우 개인의 자유권보다도 생존권과 발전권이 더 절박하다는 논리로 반박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인권기록'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3.2)하여 미국내에서도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편, 미국이 중국의 「파룬궁」(法輪功) 지도자 리홍즈(李洪志) 송환 요구를 거부하고, 미 이민국법원이 파룬궁 지지자의 정치난민 요청을 수락(11.11)하였던 점도 미·중간 인권대립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1999년에도 대만문제가 미·중관계에서 핵심 이슈로 부각되었다. 1월 일부 미 의원들이 대만의 전역미사일방어체제 참여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중국의 분열을 기도하는 내정간섭 음모이며 아시아의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1.12)하였다. 미 국방부는 '연례국방보고서'(2.2)와 '대만해협 안보정세보고서'(3.1)에서 중국의 대(對)대만 미사일위협을 심각성을 제기하고 대만에 첨단무기를 제공하고 대만을 전역미사일방어체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7월에는 미 의회에서 대만의 전역미사일방어체제 가입, 대대만 첨단군사무기 제공 및 대만의 군사능력 제고를 요구하는 내용의 '대만안보 강화법안'이 통과되었으며, 11월에는 '대만의 세계보건기구 가입 지지법안'이 제기되었다.

7월 리덩후이(李登輝) 대만총통의 '양국론' 발언 이후 중·대만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은 중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 중국은 대만의 독립선언과 대만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섭시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면서 대만주권 회복의 정당성을 역설하였다.

1999년 미·중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것은 NATO의 유고주재

중국대사관 폭격사건이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NATO 군대의 미사일이 중국대사관을 폭격(5.8)하자, 중국은 이를 중국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면서 진상 규명과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중국은 미국과의 고위 군사교류 중단, 무기확산방지·군비통제·국제안보문제 관련 협상 중단, 인권대화 중단, WTO 가입 협상 중단(5.14) 및 미 군함의 홍콩기항 금지를 선포(5.21)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강화하였다. 6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증시에도 장쩌민 주석은 미국의 패권반대와 신국제질서 구축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군사공격 행위를 비난하였다.

중국대사관 폭격사건으로 인한 미·중간의 대립국면은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사과전화(5.14)와 피커링 특사 및 앤드루스 미 국무부 법률비서관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피해보상문제가 논의됨으로써 9월 이후부터 진전되었다. 뉴질랜드에서 개최(9.12~13)된 아·태경제협력체 지도자회의에서 장쩌민과 클린턴이 관계개선에 합의함으로써, 대사관 폭격사건과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핵과 미사일기술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콕스보고서' 공개(5.25)로 인해 악화된 양국관계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게 되었다. 챔벨 미 국방부 차관보의 중국방문을 통해 미·중간 고위 군지도자 대화가 다시 전개(11.20)되었다.

이처럼 양국관계가 다소 완화되면서 미·중간 중국의 WTO 가입 협상이 재개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을 둘러싼 미·중간 협상이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의 방미시(4.8~15)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중국의 시장개방 폭 확대문제와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문제가 걸림돌로 남았다. 이들 장애요인들이 양국간 절충형태로 타결(11.15)됨으로써 1987년 이래 지속되어 온 중국의 WTO 가입을 둘러싼 미·중간 협상이 종결되었다. 중국은 2002년까지 농산물 수입관세를 17% 이하로 낮추기로 하고, 미국은행의 외환업무와 합작은행 설립을 허용하였으며, 통신분야에서 외자지분 한도를 49%까지 허용하기로 약속

하였다. 미국은 중국에게 '정상무역국 지위'와 '일반특혜관세제도'를 부여하게 된다.

중국의 WTO 가입 협상 타결로 미·중간 경제협력 확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양국간 교역 역조폭은 축소되지 않고 있다. 1998년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569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중국측 통계로는 210억 달러)하였으며, 1999년에도 양국간 무역 역조현상은 지속되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4억 5,000만 달러 상당의 통신위성 판매 불허조치(2.23)를 취한 것도 양국간 무역역조 해소에 장애가 되었다. 그렇지만, 미국은 중국의 2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여 중국경제 발전에 사활적인 파트너가 되었고, 중국의 값싼 상품과 방대한 시장도 미국경제에 중요한만큼 양국간의 경제교류는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에는 미국에서 대통령후보간 대중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대만에서 10대 총통선거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는 바, 미·중간 정치·안보적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0년 3월 실시될 대만 총통선거 과정에서 대만독립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될 경우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미·중간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 1999년 12월 마카오주권 회복 이후 21세기 동아시아에서 강대국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중국이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고취할 것이라는 점도 미·중간 '건설적 전략동반자관계' 구축에 장애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이 지역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정·군 고위 지도자 상호 교환방문 등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2000년 하반기부터는 아·태경제협력체 지도자회담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WTO 가입협상 타결을 계기로 미·중간 경제교류·협력은 대폭 확대될 것이다. 중국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

고 관세·비관세장벽을 완화할 것이며, 미국은 중국내 통신·보험·금융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WTO 가입으로 1990년 이래 대중 최혜국대우 연장문제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이 해소될 것이다. 경제분야에서서 관계증진은 미·중간 안보적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3) 미·러관계

1999년 미·러는 이라크문제, 코소보사태, NATO 동유럽 확대 및 체첸사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보였으나, 러시아가 미국의 경제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국간의 대립이 심화되지는 않았다.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모스크바를 방문(1.25~27)하여 프리마코프 총리, 이바노프 외무장관 등과 만나 러시아측과 마찰을 빚어온 이라크공습, 코소보사태, '제2단계 전략핵무기감축협정'(START II) 비준, NATO 동유럽 확대, 이란에 대한 러시아의 핵·미사일 기술 수출통제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올브라이트는 양국간 부분적 입장 차이가 미·러관계 전반을 해치게 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및 이란에 대한 러시아의 첨단기술판매 허용 등 양국간 쟁점 사안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변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미국이 '국가미사일방어체제' 구축계획을 본격화하기 위해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ABM)조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미국은 유고정부와 알바니아계간 코소보 평화정착을 위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 NATO를 동원하여 무력활동을 단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러시아는 코소보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주장하며 UN 안보리의 동의 없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무력행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

지하였다. NATO 군대가 유고 공습을 단행(3.24)하자 미·러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NATO의 유고 공습을 비난하고 START II 심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3.26)하였다. NATO의 유고 공습이 강화되자 러시아는 흑해함대를 유고 인근 아드리아해에 파견(4.2)하고, 유고로 향하는 러시아 유조선을 NATO가 공격할 경우 보복할 것임을 경고(4.28)하였다. 이와 함께 엘친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에서 핵무기는 국가안보와 군사력 유지의 핵심요소로써 핵전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러시아의 최우선 국가과제 중의 하나라고 강조(4.29)하였다.

G-8 정상회담 폐막 직후 클린턴 대통령과 엘친 대통령은 별도 회담(6.20, 필른)을 갖고 악화된 양국관계 복원에 주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엘친 대통령은 START II 비준을 위해 국가두마(하원)에 압력을 가하기로 약속하였으며 ABM조약 개정을 위한 협상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클린턴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지원을 다짐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코소보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할 러시아군의 책임구역을 할당하고, START III 논의 재개에도 합의하였다.

미·러 양국은 군축실무협상(8.17~19, 모스크바)을 개최하고 러시아 의회의 START II 비준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양국은 ABM조약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이를 보였다. 미국은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확산위협 증대 등을 이유로 조약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러시아는 ABM조약 개정시 양국간 전략적 균형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군비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러시아의 신뢰확보를 위해 '국가미사일방어체제' 공동개발을 통한 기술공유 방안을 제시(9.12)한 데 이어, 코언 국방장

관의 방러(9.13) 등을 통해 ABM조약 개정 필요성을 재강조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의 ABM조약 개정 의도에 대해 불신을 표명하면서, START II 비준과 별개로 START III 협상 개시를 요구하는 등 군축문제를 둘러싼 이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9월 체첸반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대형 아파트 연쇄 폭탄테러사건 발생 이후 러시아군은 체첸지역에 대한 군사공세를 강화하였다. 중동평화회담 참석차 노르웨이 오슬로를 방문한 클린턴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총리에게 러시아가 체첸측에 과잉대응하고 있다면서 군사공격 자제를 요청(11.2)하였다 그러나 푸틴 총리는 러시아는 국내 테러위협에 합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체첸사태가 러시아 내부문제임을 강조하였다.

체첸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클린턴 대통령은 OSCE에 체첸사태 중재를 제의하였다. OSCE 정상회의에 참석(11.18)한 엘친 대통령은 미국 등 서방측이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내정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체첸사태를 둘러싸고 대립하였던 러시아와 서방측은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체첸사태의 정치적 해결, OSCE의 사태 해결 기여, 체첸사태의 내정문제 인정, 러시아 영토 존중 등에 합의(11.20)하였다. 그러나 이바노프 외무장관은 이 합의가 정치적 간섭을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러시아가 대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미국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문제 등에 대한 러시아의 협력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2000년에도 미·러간에는 경제협력과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문제 등에 있어서 협력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ABM조약 개정, 체첸사태, 러시아의 대외 군사기술 수출 등을 둘러싼 미·러간 갈등이 양국의 경제협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000년 6월과 11월 러시아와 미국이 대선을 치를 예정으로 있는데, 양국 모두가 국내정치를 의식하여 쟁점사안에 대한 협상에서 양보하기를 꺼릴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ABM조약 수정에 계속 동의하지 않을 경우 ABM조약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며, 러시아는 조약 개정이 양국의 핵무기 감축 노력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따라서 군축협상과 ABM조약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미·러간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러 지도층 모두 양국관계가 적대관계로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 (4) 일·중관계

1999년 일·중간에는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 통과, 일본의 '전역미사일방어체제' 연구참여, 대만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야기되었다. 그러나 양국은 1998년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방일시의 합의에 따라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고, 1999년 12월 리루이환(李瑞環) 중국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장의 방일 등 지도부 교환방문을 통해 21세기를 향한 '우호협력 동반자관계' 구축을 모색하였다.

일·중간에 긴장이 지속되었던 이유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세에 대한 중국의 우려 때문이었다. 중국은 미·일 신방위협력지침과 전역미사일방어체제에 대만을 포함시킬 경우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3월 일본이 미국이 주도하는 전역미사일방어체제 구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자, 중국은 "군사강대국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이라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는 "미사일에 관한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동시에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을 간섭하는

행동”이라고 비난(3.15)하였으며, 쑨위시(孫玉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은 자국의 방위를 자국 영토와 인근해로 제한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군사강국이 되기 위한 길에 나서서는 안된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대해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상은 “TMD시스템은 공격이 아닌 순수한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중국이 일본의 방위체제를 비난한다면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하였고,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는 전역미사일방어체제가 순수한 방어적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필요하다면 중국정부에 직접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미·일간 신방위협력지침과 관련해서도 중국은 1996년 미·일 정상회담 이후 줄곧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5월 일본국회에서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관련법안이 통과되자, 중국은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기도하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대만문제도 일·중관계 진전에 장애가 되었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 동경 지사가 대만을 방문하면서 대만을 ‘국가’로 지칭하는 등 중국정부를 자극하였다. 왕이(王毅) 중국외교부 부장조리는 다니노 사쿠다(谷野作太郎) 주중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이시하라 지사의 대만방문과 같은 사태 재발 방지를 요청(11.15)하였으며, 쑨위시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반중국적인 본질을 거듭 드러내 중국통일의 대사업을 파괴하는 악랄한 의도”라며 강한 불만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동경도 지사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대만과의 협력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국민반응을 일축하였다.

1997년 11월 체결된 ‘신어업협정’ 발효문제를 둘러싸고서도 양국간 이견이 대두하였다. 일·중은 1998년 4월과 5월에 각각 동 협정의 국

내 비준절차를 거쳤지만, 비공식 실무회담과 네 차례에 걸친 각료급 후속협상에도 불구하고 조업범위 및 조건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협정 발효가 지연되었다.

어업협정 문제와 관련 양국간의 최대 쟁점사안은 공동관리수역 내에서의 남획방지를 위한 상호 허가제 도입 문제이다. 일본은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어로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허가제 도입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신어업협정'에서 공동관리수역내 단속권을 어선 소속국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허가제가 불필요하다는 자세를 고수하였다. 특히 일본은 자국 어선이 중국의 경제수역내에서 연간 2만여톤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 데 비해 중국은 일본측 경제수역내에서 연간 수십만톤 이상을 어획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어업협정 파기도 불사할 수 있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였다. 특히 이 문제는 조어도(釣魚島) 영유권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신어업협정이 파기되고 일본측 경제수역내에서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일·중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만, 제2차 세계대전중 일본군이 중국내에 폐기한 화학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것은 일·중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7월 오부치 일본 총리의 방중기간 중 일본은 중국정부로부터 북한의 미사일개발을 저지하는데 협력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냈다. 8월에는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관련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한 후 처음으로 중국 군사대표단이 일본을 공식방문하여 상호 군사교류 문제를 협의하였다.

2000년에도 일본의 방위력 증강문제, 대만문제, 어업갈등 등으로 인해 일·중간에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중국을 필요이상으로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나, 전역미사일방어체제 구상문제와 신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다. 중

국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대해 계속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다만 양국 공히 한반도의 불안정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중간 협력 분위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5) 일·러관계

1999년 일·러는 지도부 교환방문, 군인사 교류 및 무역·경제협력위원회 설치 합의 등을 통해 협력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전역 미사일방어체제' 구축문제는 일·러관계 진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오부치 일본 총리는 러시아를 방문(8.31)하여 엘친과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APEC정상회의(9.12~13, 뉴질랜드)에서 푸틴 러시아 총리와 회담을 개최하였다. 하시모토 전 일본총리(4.20~22), 고무라 외상(5.28~30), 노로타 방위청장관이 러시아를 방문(8.16~19)하였으며, 흐리스텐코 러시아 제1부총리와 샤프바리안츠 러시아 경제장관이 일본을 방문(8.31~9.3)하여 북방영토문제와 경제협력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일본은 「동경선언」('93.10)에 입각하여 북방영토문제를 해결하고, 2000년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대러외교의 기본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오부치 일본 총리는 러시아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러시아의 개혁 노력을 지원하고, 대러관계를 완전히 정상화 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1.19)하였다.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2.20~23)과 마슬류코프 러시아 제1부총리가 일본을 방문(3.14~17)하였고, 고무라 일본 외상이 러시아를 방문(5.28~30)하였는데, 여기에서 양국은 북방영토문제와 경제협력문제 등 공통 관심사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일·러는 군사안보분야에서도 활발하게 교류·협력을 추진하였다. 나츠가와 일본 통합막료회의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데 이어 크바시닌 러시아 참모총장과 자하렌코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일본을 방문하는 등 군 고위인사 교류를 활성화하였다. 특히 노로타 일본 방위청장관이 러시아를 방문(8.16~19)하여 세르게예프 러시아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개최(8.16)하였는데, 여기에서 국방장관 상호 교환방문과 합동훈련 지속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위교류 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양국은 수색·구난 합동훈련 실시, 러시아군 장교의 일본 자위대 견학, 일본 해상자위대와 러시아 태평양 함대사령부간 핫라인 설치 등에 합의하였다.

북한의 미사일재발사 저지를 위해서도 일·러는 협력하였다. 노로타 일본 방위청장관은 북한의 미사일재발사 저지를 위한 러시아의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정치·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하였다. 전역미사일 방어체제 등 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관련 러시아는 일본에게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경제문제와 관련, 양국은 경협증진을 위한 무역·경제협력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였다. 일·러는 8월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데 합의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러시아에 약속하였던 11억 달러 신용차관 공여 동결조치를 해제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1차분 5,000만 달러와 2차분 3억 달러 및 3차분 1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통상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양측이 「투자보장 및 이증과세 방지 협정」(’98.11 체결)의 조기 시행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러시아는 동 협정의 조기 의회 비준을 약속하였다. 일본은 대러 투자촉진과 보호를 위해 러시아의 세제 및 기타 법체제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

였다.

이밖에 일본은 구소련 핵무기 해체시 발생하는 플루토늄 처리, 러시아 극동합대의 원자력 잠수함 해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억 달러를 추가 제공하기로 공식 발표(6.18)하였다.

북방 4개도서 반환문제도 일·러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다.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북방영토를 반환받고 2000년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고자 하였다. 북방4개도서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일본은 북방4개도서 원주민의 무비자 일본방문을 확대한다는 데 합의(5.29)하였다.

2000년 상반기 열린 러시아 대통령의 일본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이를 계기로 북방 4개도서 반환문제와 평화조약 체결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다. 특히 북방 4개도서의 공동개발 가능성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 (6) 중·러관계

1999년 중·러는 정상회담, 정부와 군 고위인사들의 상호교류 등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심화시켰다. 특히 양국은 코소보사태와 미·일의 TMD 구상, 체첸문제 등과 관련하여 상호 입장을 긴밀히 조율하면서 미국의 패권정책에 공동 대처하였다. 또한 양국은 경제관계가 정치관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통상·경제관계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러는 두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였다. 제4차 중·러 및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5개국 정상회담이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개최(8.24~25)되었다. NATO의 동구 확대와 미·일의 TMD계획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5

개국 정상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슈케크 공동선언」을 채택(8. 25)하였다. ① 미국과 NATO가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불만을 표시하고 중앙아시아 역내에 새로운 협력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② 5개국 국경지역 병력감축과 중앙아시아의 비핵지대화를 선언하고, ③ 이슬람 근본주의, 분리주의, 국제테러, 마약 밀매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④ 카스피해 유전 및 천연자원을 공동 개발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앞서 열린 대통령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은 별도의 정상회담(8. 25)을 갖고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러 양국은 국교수립 50주년(10.2)을 맞이하여 축하메시지를 교환하고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기로 다짐하였다.

열린 대통령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에서 정상회담(12. 9~10)을 갖고 주권보다 인권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정책을 패권주의적 발상이며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고 신간섭주의에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21세기를 유엔과 국제법 기초의 다극세계로 건설, 미·일의 TMD체제 구축 및 대만의 참여 반대, 대이라크 경제제재 취소와 정치적 해결, 유엔 결의에 따른 코소보사태의 해결, 대만의 '양국론'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와 체첸사태의 순수 내정문제 간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12.10)하였다. 또한 양국 외무장관회담(12.9)에서는 양국의 서부국경선 50km와 동부 국경선 4,300km에 대한 획정문제를 종결하는 3개 협정이 서명되었다.

중·러 양국은 실무차원에서도 NATO의 유고슬라비아 공습과 미·일의 TMD 구상에 반대하는 공조체제를 유지하였으며 기타 지역 분쟁 문제들과 관련 긴밀한 협의를 하였다. 주룽지 중국 총리는 러시아를 방문하여 열린 대통령 및 프리마코프 총리와 연쇄회담(2.25)을 갖고 아·태지역과 코소보, 이라크 문제, NATO 확대 등 전세계 안정과

관련된 사안 및 쌍무간 경제협력과 군수산업 공조방안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 결과 양국 정상의 정례적인 회담과 경험 관련 11건의 각서와 협정이 서명되었다. 카라신 러시아 외무차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외교부 부부장과 회담(3.13~14)을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 쌍방관계 발전문제와 한반도,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코소보를 비롯한 지역분쟁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미국의 TMD, NMD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체르노미르딘 전 총리(5.12)는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북경을 방문하여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과 회담하고 코소보 문제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을 조율하였다. 양국은 이 문제가 유엔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NATO 공습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베오그라드 주제 중국대사관 폭격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군사면에서 코라피에리니코프 러시아군 참모차장(5.31)과 장완니엔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6.9)은 상대국을 상호 방문하여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실현을 위해 공동노력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또한 러시아는 베이징에서 개최(8.24)된 양국 경제협력회의에서 최첨단 기종인 SU-30 전투기 약 40대와 핵잠수함 2척을 판매하기로 중국과 합의하였다.

경제면에서는 주룽지 중국 국무원 총리의 러시아 방문시(2.24~27) 40억 달러 규모의 시베리아 가스관 건설의 타당성 조사, 러시아 원조로 중국에 건설될 원자력발전소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회담 결과 양국 정상의 정례적인 회담과 경험 및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서의 협력 관련 11건의 각서와 협정이 서명되었다. 양국간 경제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7차 정부간 회의가 중국에서 개최(8.24)되어 과학과 첨단기술에 대한 협조 및 경제 분야에서의 상호협조를 위한 일련의 협정들이 검토되었다. 중·러 및 중앙아시아 5개국 비슈케크 회담

(8.25)에서는 미·영 등 서방이 카스피해 지역개발을 독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스피해 유전 및 알루미늄, 금,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 공동개발 등에 합의하고 이를 5국의 경제회복과 발전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중·러 양국은 2000년에도 21세기가 다극세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일초강국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적극 견제하고자 할 것이다. 21세기의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는 안보·군사 뿐만 아니라 통상·경제 분야도 포함하는 광범한 형태의 협력이 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러 양국은 인도와의 안보·군사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경제협력이 정치협력 수준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고 있다는 판단하에(1998년 교역액 약 55억 달러) 200억 달러 교역목표 달성 등을 위해 경제분야에서의 협력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원유와 가스를 중국에 공급하기 위한 송유관과 가스관 건설,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등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 추진도 점차 가시화될 전망이다.

## 2. 한국의 주요 대외관계

### 가. 한·미관계

1998년 8월 금창리 지하 핵 의혹시설 및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 의회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이 증대되자 클린턴 대통령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98.11.12)하여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시작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페리 조정관과의 면담('98.12.7)에서 대북 포용정책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과 미·북, 일·북 수교를 통한 체제보장 등의 포괄적 협상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페리 조정관은 한국이 주장하는 대북 포용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포용정책의 한계선을 설정하려 하였다.

천용택 국방부 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제3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1.15, 서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에 대한 공동감시와 정보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미국은 한국 정부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추구 등 대북정책 3원칙을 토대로한 포용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한국에 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는 등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80km인 한국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을 300km로 늘리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임동원 외교안보수석은 미국을 방문(1.26~29)하여 페리 조정관 등과 접촉을 갖고 대북 포용정책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국의 대

북정책을 조율하였다. 미·북간 금창리협상이 타결(3.16)되자 임동원 외교안보수석과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 등은 페리 조정관과 접촉하여 새로운 대북정책보고서에 포용정책의 기초가 담기도록 권유하였다. 한·미·일 고위정책협의회(4.24~25, 하와이)에서 3국은 우선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북한이 이에 호응하면 정치·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압박을 가한다는 한국이 제시한 포괄적 협상방안에 최종 합의하였다. 아울러 대북정책 협의·조정을 제도화 하기 위한 '3자 조정·감독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 CNN과의 회견(5.5)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는 한반도 냉전구조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5대 과제로서 남북간 화해·협력, 미국·북한 및 일본·북한의 관계 개선과 정상화, 남북한 군비통제, 북한의 대외개방 환경조성,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남북한 함정간 포격전이 발생(6.15)한 직후 미 국방부는 조기경보통제기를 한국에 배치하여 대북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주한 미 공군기지에 전투기를 증원시키고 항공모함을 한반도 인근지역으로 이동 배치하였다. 미국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과 정상회담(7.3)을 갖고 북한의 서해도발 사태 및 경제협력 등 양국간 현안을 논의하고,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포용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클랜드 APEC 지도자회의시 한·미·일 3국은 정상회담을 개최(9.12)하였는데, 여기에서 한·미·일은 대북 포괄적 접근방안이 한반도에서 평화공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는 공통인식을

재확인하였다. 3국 정상은 대북 포괄적 접근 방안의 향후 추진방안,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억제, 제네바 합의 이행 등 대북정책 전반에 걸쳐 협의하였으며, 동티모르 정세,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문제 및 국제기구에서의 협조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페리 조정관은 대통령과 의회에 새로운 대북정책 권고안을 제출(9.15)하였다. 페리보고서는 핵·미사일 위협중식을 위해 북한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미국은 대북수교를 포함한 관계정상화를 추진해야 하며,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과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페리보고서는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북 포괄적 접근방식 채택, 미국의 대북담당 대사급 임명, 한·미·일 '3자 조정·감독그룹' 유지, 미 의회의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 북한 긴급상황 대비 등 다섯 가지 정책건의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를 공개한 후 페리 조정관은 김대중 대통령과 면담(9.22, 서울)하고 북한과의 포괄협상 방안을 사전에 조율하였다.

한·미 양국은 제3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11.23, 워싱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동결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여전히 위협적이라며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천명하였다. 특히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해 유사시 미국의 생화학무기 부대 및 장비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하는 등 생화학전 대비책을 크게 보강하기로 하였다. 최근 현안으로 부각된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사건과 1960년대 후반 비무장지대에서의 고엽제 살포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성있게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동안 중단되었던 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을 위한 협상도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에도 한·미 양국은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대북 포용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미국은 고위급회

담, 4차회담 등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한국과 입장을 긴밀히 조율하여 공동보조를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내에서는 2000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북정책이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한국은 다시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 포괄적 협상을 적극 추진하도록 외교적 접촉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나. 한·일관계

1999년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과 각료회담을 통해 안보분야에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경제부문에서도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어업협정도 타결되었다.

3월 20일 정상회담후 발표된 공동회견에서 오부치 일본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 북한 미사일과 지하 핵 의혹에 대해 미국과 함께 긴밀히 대화·협조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KEDO에 대한 지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APEC 지도자회의 참석을 위해 오클랜드를 방문한 김대통령과 오부치 일본총리는 정상회담(9.12)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김대통령은 “인내심을 갖고 포용정책을 지속해 나가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만일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KEDO와 포용정책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변화하면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오부치 총리는 “일본은 또 다시 일본 상공을 통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포용할 수 없다”며 “그러나(미사일) 발사 때에도 3국의 공조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문화교류 측면에서 김대통령은 “제2단계 일본대중문화 개방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언급(3.20)하였고, 오부치 총리는 “20세기 문제는

20세기에 풀어야 한다”면서 천황의 방한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일본대중문화 2차 개방 방안을 발표(9.10)하여 일본영화 한국내 상영을 허용하였다. 김종필 총리는 아끼히토 일본 천황을 예방하고 천황의 방한을 초청하였다.

경제분야에서 양국 정상은 투자협정을 조속히 체결한다는데 합의 함(3.20)에 따라 한국은 일본기업에 대해 미국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일본 기업의 대한 투자는 1998년 말 현재 외국기업 전체 투자액의 5.7%에 불과한 5억 300만 달러를 기록, 미국(29억 7,400만 달러), 네덜란드(13억 2,300만 달러), 독일(7억 8,600만 달러)의 투자액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일본수출입은행을 통해 10억 달러를 산업은행에 대출하고 이 돈을 일본에 진출할 한국 기업에 대출해 주도록 하였다.

오부치·김종필 총리회담(9.2)에서 김총리는 1999년 상반기 대일무역역자가 37억 달러, 연말까지는 8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섬유·가죽제품 등 한국측 주요 관심품목 16개 분야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구하였다. 반면 오부치 총리는 주요 대일 무역역조 원인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일동포 참정권 문제에 대한 오부치 총리의 답변은 “좀더 진지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주변지역 유사시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지원활동을 대폭 강화한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이 5월 일본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주변사태’의 범위를 방치할 경우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에 이를 우려가 있는 사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리적인 활동범위는 미·일 안보조약상의 극동(필리핀 이북 및 일본 주변)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일은 군사정보교환 등 비전투 분야에서도 교류를 강화하였다.

한국 국방부는 5월 4일 북한 간첩선 출현 등 긴급상황 발생시 한국 군과 일본자위대가 신속히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긴급연락체계를 구축, 6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긴급연락망 가동은 천용택 국방장관과 노로타 호세이 일본 방위청장관이 1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긴급연락망은 한국 국방부 정책기획국장실과 일본 방위청 방위심의관실, 한국 해군 작전사령부와 일본 해상막료감부, 한국 공군 작전사령부와 일본 항공막료감부 사이에 각각 설치되어 운영된다.

한국과 일본은 8월 5일 동중국해상에서 약 1,300명의 해군과 11척의 항공기 및 군함을 동원, 양국 최초의 합동 해상수색 및 구조훈련을 실시하였다. 제주와 규슈 중간 해상에서 실시된 이 훈련에는 한국 해군의 구축함 및 호위함, 해상초계기, 헬기 등이 각각 1척씩 참가하였으며 일본 해상 자위대에서는 구축함 3척과 해상초계기 1대, 헬기 2~3대 등이 참가하였다.

한·일 신어업협정(1.22)은 양국간 중간선(동경 135도 30분)을 경계로 상호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하고, 이를 연안국의 독점적 조업수역으로 하되, 급격한 조업감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 어선들이 상대국 수역에서도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범위내에서 조업이 가능토록 규정하였다.

2000년에도 한·일은 정치·안보·경제분야에서 대체적으로 협력관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일부 사안에서는 이견을 노정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과 과거사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일간에 부분적으로 이견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북간 수교교섭이 한·일간 공조체제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경제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나, 무역역조문제는 한·일간 경제문제로 계속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 다. 한·중관계

1999년 한국과 중국은 수교 7주년을 맞아 21세기를 지향한 ‘협력 동반자관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한·중 정상이 2차에 걸쳐 회동하고 건국 이후 최초로 한국의 국방장관이 중국을 공식 방문(8.23~29)함으로써, 양국관계가 안보면에서도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발사 저지를 위한 한국의 외교노력을 지지함으로써 한·중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임동원 외교안보비서관이 중국을 방문(2.11~13)하여 중국지도부에게 북한 핵·미사일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행사를 요청하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아태경제협력체」 지도자회의 참석시 북한의 미사일발사 저지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제의(9.12)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협조할 뜻을 밝혔다

8월 조성태 국방장관의 중국방문은 한·중관계가 경제위주의 관계에서 안보협력단계로 발전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 그 동안 한·중간 국방관련 인사의 교류는 국방차관보의 방중, 중국 부총참모장의 방한, 합참정보본부장의 방중 수준의 군인사 교환방문에 국한되었다. 중국이 한국 국방장관의 방중을 수락한 것은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과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조성태 장관은 6.25전쟁 참전부대, 베이징 방공미사일부대 및 청따오(靑島) 북해함대 사령부 등 군사시설을 방문하는 한편, 중국 군지도부와 북한 미사일문제를 논의하고 국방장관 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에서도 한·중이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였다. 4자회담 5차 본회담과 6차 본회담 직전 치엔용니엔(錢永年) 중국측 4자회담 대표와 박건우 한국 4자회담 대표가 서울과 베이징을 각각 방문하여 4자회담 전략을 사전 협의·조율하였다. 4자회담 본회담에서 중국은 남북한의 대립적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군축·비확산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시작되었다. 중국 외교부 군축담당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중간 군축·비확산회담이 처음으로 개최(6.7)되었다. 양국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억제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과 '화학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중국은 한국이 TMD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선양(瀋陽) 영사사무소가 설치된 점도 한·중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였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한·중은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 방중시 합의에 따라 영사사무소 설치 양해각서를 교환(1.28)한 데 이어, 7월 영사사무소를 공식 설치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중국 동북3성지역에 진출한 상사주재원의 안전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국제무대에서도 한·중간에 협력분위기가 강화되었다. 김대중 대통령과 장쩌민 주석은 뉴질랜드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 지도자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한국은 미·중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11월에는 마닐라에서 한·중·일 3국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상호간 경제협력을 위해 공동으로 연구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3국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다만, 중국의교부가 한·미 「울지포커스훈련」에 대해 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8.17)한 사실은 한·중간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중국은 한·미 안보관계 강화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중국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 동북3성지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을 불법 선교와 재중 탈북자 지원혐의로 체포하였던 점도 한·중 외교관계에 미묘한 갈등을 야기하였다.

한·중은 경제분야에서도 기존의 관계발전 추세를 유지하였다. 1998년 양국은 한국의 외환위기로 인하여 212.6억 달러에 달하는 교역을 시험하는 데 그쳤으나(전년대비 11.6% 감소), 1999년 상반기 한국의 대중 수입규모가 전년대비 14.4% 증가하는 등 1999년에 들어서는 교역증가세가 뚜렷하게 회복되었다. 한·중간에는 이미 연간 100만명에 이르는 인적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1998년 중국이 한국을 자유여행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한국이 중국인에 대해 사증발급인증서 발급제도를 폐지하였기 때문이다. 한·중간에는 12개의 항공노선이 개설되어 있고, 7개의 카페리호 노선이 설치되어 운항되고 있다.

그러나 한·중간 교역에서 한국이 계속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산 철강제품과 신문용지 등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등 한국에 무역역조 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국산 신문용지에 대해 반덤핑조치(6.3)를 취하였다. 베이징에서 개최된 무역실무회담(5.11~12)에서도 중국은 한국에 대해 무역불균형 시정을 요구하고 중국산 석탄구매 확대를 요청하였다. 또한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방중시 가조인된 어업협정을 발효시키기 위해 어업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배타적 경제수역내 조업조건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2000년에는 주룽지 총리와 츠하오티엔(遲浩田) 중국 국방부장의 한국방문이 예정되어 있어서, 한·중간 정치·안보적 협력확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4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며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계속 지지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WTO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한국상품에 대해서도 시장개방 폭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한·중간 교역규모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다만, 교역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한·중간 무역역조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 농산물의 한국시장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라. 한·러관계

1999년 한·러 양국은 5년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1998년 발생한 수교 이후 최대의 외교위기를 극복하고 정상관계를 회복하였다. 양국간 경제관계는 1998년의 최저상태에서 벗어났으나 체첸 내전과 폭탄 테러 등 러시아 국내정세 불안정과 경제침체로 인하여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최로 제1차 한·러포럼이 모스크바에서 개최(3.22~23)되어 양국 정부, 의회, 경제, 언론, 학술, 문화계 관계자들이 외교정책, 동북아 지역안보, 금융위기와 경제, 문화 협력 등 공동 관심사를 토의하고 양국관계 확대방안을 협의하였다.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비서관도 모스크바를 방문(3.28~31)하여 엘친 대통령의 비서실 및 외무부 고위당국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방러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포괄적 접근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의회 차원에서는 셀레즈네프 러시아 연방하원(국가두마) 의장 일행이 박준규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공식 방한(4.25~28)하여 대통령과 면담하고 재계인사들과 한·러 경험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 국회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와 주의회 의원들을 만나 한국

과 연해주간 의회접촉 증대 및 경험확대 방안 등을 논의(5.7)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모스크바를 방문(5.27~30)하여 엘친 대통령과 정상 회담(5.28)을 가졌다. 정상회담을 통해 김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강의 교를 마무리짓고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공식적인 지지를 확보하였다. 정상회담에서 21세기를 향해 동반자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한·러 공동성명」이 발표되었고 「형사사법공조조약」, 「나호드카 한·러공단 설립협정」, 「원자력 협력협정」, 「산업협력 양해각서」가 각각 체결되었다.

안보·군사면에서, 한국 정부는 남북한간 서해교전 직후 주러 한국 대사관을 통해 러시아 정부에 상황을 전달하였고, 러시아 외무부는 “양측이 자제하여 분쟁을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6.15)하였다. 1999년에는 한·러간 군사지도자 상호 방문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양국 군당국간 이해증진과 군사외교 강화를 위해 군사사절단을 교환하기로 한 전년도의 합의에 따라서 최초로 국방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6명의 친선 군사사절단이 러시아 보병사단과 총참모대학, 전투전시관 등을 시찰하고 러시아 군인사들과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6.16~27)하였다. 러시아측은 상장(중장)급 현역 군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친선사절단이 방한(8.28~9.8)하여 군사시설과 유적지 등을 시찰하였다. 또한 김동신 육군참모총장이 러시아 국방부를 방문(8.28)하여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한편, 상호 군사교류 확대와 방산장비에 대한 후속 군수지원 보장 등을 요청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추가발사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홍순영 외교 통상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이바노프 외무장관과 개별회담(7.25)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추가발사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미칠 악영향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하였다. 러시아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에게 미·일이 추진중인 TMD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세르게예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9.2~4)하였는데, 이는 한·러간 군사협력 확대와 러시아산 군사장비의 수출확대에 목적을 둔 것이었다. 또한 한·러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는 데 공감하고 미사일 발사 억제를 위해 양국 국방당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한·러는 국방정책 공동협회의 정례화, 2000년부터 공동 해상 수색 및 구조훈련의 정례적 실시, 해군간 긴급연락체계 구축 등에 합의하고 「2000~2001년 양국 군사분야 교류의정서」를 체결(9.3)하였다. 세르게예프 장관은 러시아제 킬로급(3,000톤) 및 아무르급(2,000톤) 잠수함과 함께 차기 대공미사일(SAM-X) 사업의 후보기종인 S-300 미사일과 차기전투기(FX) 사업 후보기종인 SU-35 전투기 등의 구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러간 경제교류가 다소 축소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IMF 사태와 러시아 외환위기 이후 한국기업들이 지사를 철수하고 주재원을 축소하는 등 소극적으로 러시아시장을 관리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러시아측은 광범한 러시아 물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제한과 양국의 경제난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제2차 「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5.11~12, 모스크바)와 한·러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엘친 대통령은 한국과의 교역촉진 방안과 모스크바내 한·러 무역센터 건립 방안을 적극 모색하였다. 한편, 6월 러시아 극동 포시에트와 부산을 연결하는 900km의 신항로가 개설되었는데, 이는 두만강유역에 자유경제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국제프로젝트의 시발로 간주되고 있다.

한국통신은 1998년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시내전화와 연해주 지역 이동전화 설비확장 사업(2004년까지 총 7,400만 달러 투자)을 추진 중인데, 1999년 「유럽개발은행」(EBRD)이 이 사업에 1,2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사업은 IMF체제 이후 한국업체가 러시아에 투자하는 최초의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제3차 「한·러 자원협력위원회」가 모스크바에서 개최(4.20~22)되어 이르쿠츠크 가스전 사업, 러시아산 석탄 도입, 사할린 프로젝트의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경협차관 문제와 관련, 한·러는 여러 차례의 실무회담을 갖고 모스크바 회의(10.22~23)에서 한국의 대러 경협차관 17억 달러 규모의 최종 만기를 17년 연장해서 러시아가 2016년까지 원자재와 방산물자, 과학기술 등으로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러시아는 한때 자국산 잠수함 2~3척의 구매를 강력히 요청하고 그 비용의 70%는 현금, 나머지 30%는 기존 경협차관에서 상계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나, 한국 국방부는 2004년까지 차기 잠수함 3척을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외에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는 러시아 연해주 6개 지역에 건설중인 한인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0여명의 시찰단을 파견(9.4)하고, 150가구의 주택 개보수와 함께 동포들의 농사지원을 위해 트랙터, 콤팩트 등 8만 4,500달러 상당의 농기계 구입장비를 지원하였다.

2000년은 한·러수교 10주년이 되는 해이고 양국 경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양국간 협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권자의 약 1/3이 공산주의로의 복귀를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2000년 6월 25일로 예정된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공산당이 집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시아가 개혁정책을 지속하고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양국 정부와 재계 고위인사들간 상호교류는 확대될 전망이다. 양국 국방장관의 합의(9.2)에 따라 2000년 사

상 처음으로 한·러간 해상 공동훈련이 실시되고 해군간 긴급연락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러시아 외채위기는 2000년에도 계속될 것이나 경제성장률이 1%(1998년 -4.6%, 1999년 -1%)로 예측되고 있어 양국간 교역이 점차 회복되고, 러시아는 S-300 대공미사일, SU-35 전투기, 디젤 잠수함 등 군사무기 판매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양국 도시와 지방간의 교류·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 II. 북한정세

### 1. 대내정세

#### 가. 정치동향

1999년도 북한은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충격, 경제난에 따른 '고난의 행군'을 마감하고, 새로운 목표인 '강성대국 건설'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취임 이후 김정일 정권이 급속히 정상화되는 추세를 보였고 그 공적은 김정일에게로 돌려졌다. 1999년도 북한정치 분야의 특징적 모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의 권위 제고를 위한 위대성 부각이 두드러졌다. 김일성 87회 생일 경축 중앙보고대회(4.14), 김일성 사망 5주기 중앙추모대회(7.8), 김형직출생 105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7.10), 정권창건 51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9.9), 김정일당총비서추대 2돌 중앙보고대회(10.8) 등 각종 보고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 논리하에 김정일의 위대성과 김정일 중심 단결이 강조되었다. 김정일 위대성 강조 이유는 김일성 사후 주민의 심리적 아노미를 해소하고 김정일 중심의 국가체제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김정일이 양어장, 소금공장, 중소형발전소 등 경제분야에 대한 현지지도를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11월말 현재 67회의 현지지도중 군관련 40회, 경제관련 21회, 기타 6회 등을 실시하였다.

셋째, 당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로동신문」(5.27) 정론 “강성대국 건설의 핵심부대” 제하의 글을 통해 노동계급이 강성대국 건설의 핵심임을 강조, 혁명과 건설의 중추세력으로 군을 내

세우던 종전의 태도와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식량난으로 인한 아사자 증가 등의 악재로 인한 체제붕괴 방지를 위해 군부를 우대해 왔다. 군부 출신의 서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선군정치', '선군후로' 등 군우대 구호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군우대를 통해 체제안정이 어느 정도 달성되는 반면, 군우대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였다. 이에 김정일은 전통적인 당우위체제로의 복귀를 시도하였다. 그 동안 군대가 사회통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집단적인 민간일탈행동이 감소하고 군의 건설 참여를 통해 생산성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서해사태와 같은 군사모험주의, 군의 일탈행동 증대, 당에 대한 군의 위압적 태도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당·군 균형체제'에서 '당우위체제'로의 복귀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국가기구의 정상화가 시도되었다.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3.8)가 치루어 지고 5년만에 예산심의회가 진행되었다. 북한은 '중앙선거지도위원회 보도'(3.8)를 통해 유권자 99.9%가 투표에 참가, 100% 찬성으로 대의원 2만 9,442명을 선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대의원은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들로 구성되었고, 여성은 20~30%를 차지하였다. 1998년 최고인민회의 구성에 이어 지방차원의 인민회의가 구성됨으로써 전국적인 행정기관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김일성 사후 5년만에 국가예산 심의회가 있었다.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 회의(4.7~9)가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되었고 1998년 결산과 1999년 예산심의 및 인민경제계획법 채택이 이루어졌다. 이 회의 의안이 모두 경제관련 사안인 것은 앞으로 경제문제가 중요 사안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인민경제계획법을 통해 자본주의시장 경제를 배격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것은 '황색바람'을 철저히 차단하고 '모기장'식 개

방을 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로동신문」·「근로자」(6.1) 공동논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배격하자”는 제하의 글을 통해 자본주의요소 침투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모든 분야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해’ 내각의 성(省)이 신설 또는 분리되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을 「도시경영성」과 「국토환경보호성」으로 분리(3.3)하였고, 「체육성」을 「내각체육지도위원회」로 개편(11.3)하는 한편, 「전자공업성」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북한 내각은 2위원회, 27성, 1원, 1은행, 2국으로 되었다.

다섯째, 일부 원로들의 퇴진이 있었다. 김정일로부터 ‘혁명선배’로 존대받던 이종욱이 사망하고, 박성철·김영주 등은 권력 일선에서 퇴진하였다. 이들은 인민군창건 67주년 중앙보고대회(4.24) 이후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와병중이거나 아니면 후진을 위해 일선에서 퇴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퇴진에도 불구하고 김철만, 백학림 등이 80대, 김영남, 이을설, 전병호 등이 70대, 조명록, 연형묵, 김영춘 등이 60대여서 전통적인 노·장·청 구조는 존속되고 있다. 채취공업상 손종호를 비롯한 최종건(도시경영상), 장일선(국토환경보호상), 변영립(교육상), 강릉수(문화상) 등의 등장도 이러한 기조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000년 북한정치부문에서는 큰 변동없이 정치적 안정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김정일은 적극적으로 대내외정책에 개입하여 소위 ‘21세기의 태양’인 자신의 권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김정일의 권위 제고를 통한 정치적 안정화를 위해 ‘김일성 = 김정일’ 논리가 지속되면서도 김정일의 위대성이 좀더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일사상’으로 명명된 ‘애국·애족·애민사상’이 더욱 정

교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급주의'로 치장된 주체사상보다는 1986년 이후 강조되기 시작한 '민족제일주의'가 더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대남정책에서도 민족의 화해협력을 강조하는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이 자주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우상화에 필요하다면 '김정일 수령' 선포도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난 해결을 통한 권위 제고를 위해 경제분야에 대한 김정일의 현지지도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민동원과 분위기 쇄신책인 '강성대국' 건설론이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성대국 건설 실천운동인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이 확대·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운동은 단순한 노력동원의 차원을 넘어서 1970년대 '3대혁명소조운동'이나 '3대혁명붉은기창조운동'이 그랬던 것처럼 '로쇠'를 척결하고 '맑은 것'을 청산하는 정치적 운동으로 발전할 것 같다. 이를 통해 북한은 김정일 정권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젊은 피' 수혈을 통해 보다 활기찬 21세기를 만들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김정일 이후 후계자 부상작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59세였던 1971년부터 후계자로 급부상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 경우 후계자는 북한의 '유교사회주의적' 특성상 친·인척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넷째, 제7차 당대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1990년대 들어 군부의 부상과 함께 당의 위상은 현저히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당대회도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으며, 당중앙위원회도 김일성 사후 거의 활동을 중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정일은 당대회를 통해 사회주의권 붕괴, 경제난 등으로 인해 추락된 당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한편, 새로운 비전 제시를 통해 주민사기를 진작시키려 할 것이다. 북한은 과거 당대회시 일반적으로 지난 기간의 성과를 대

대적으로 선전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북한이 식량난 호조를 선전하고 지방단위의 '제2의 천리마대진군 선구자대회'를 통해 이를 김정일의 치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은 당대회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용인 것으로 해석된다.

만일 당대회가 개최된다면 당중앙위원회 정·후보위원 교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정·후보위원 교체,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 보임, 당중앙군사위원회 교체 등 폭넓은 인물교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나. 경제동향

1999년 북한의 경제는 국제사회의 지원, 곡물생산의 증가, 에너지 수급사정의 개선 등에 힘입어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회복에 주력하였다. 북한은 「당보, 군보, 청년보」(1.1) 공동사설에서 1999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설정하고 경제건설에 주력해 왔다.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경제부문 현지도 활동이 1998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다. 1998년 경제부문 시찰은 모두 9회에 불과하였으나, 1999년에 들어서서는 12월 12일 현재 23회에 이르렀다. 또한 북한당국은 농업법, 양어법, 인민경제계획법, 대외경제중재법 등 경제관련제도를 정비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이례적으로 제철소, 발전소, 농장 등 주요 산업현장의 노력지원을 위해 약 2만~2만 5,000명의 제대군인, 여성근로자, 여성동맹원 등 유효노동력의 집단배치사업을 적극 전개하였다. 경제 추동을 위한 대중집회도 열렸다. ‘전국농업부문일꾼 열성자회의’(1.24~15), ‘전국 경제선동부문 열성자회의’(3.16), ‘제2의 천리마대진군 선구자대회’(11.3~4) 등이 개최되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0기 2차 회의(4.7)에서는 1998년 국가예산 집행결산 및 1999년 예산안을 채택하였다. 1999년 세입과 세출 총액은 각각 203억 8,172만 북한'원'(93억 9,000만 달러 상당)으로 1998년 대비 세입은 103%, 세출은 101.8% 증가하였다. 인민경제비는 102% 증액되었으며, 이 중 농업부문은 111%, 전력공업부문은 115%, 석탄·광업·금속·기계 등 기간산업부문과 철도운수부문은 110%, 과학사업비는 110% 증가하였다. 따라서 1999년도 중점사업부문에 대한 예산 증액으로 1998년도와 마찬가지로 경공업부문의 회생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I-1-1> 북한의 주요경제지표(1990~98)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명목GNP(억달러)	231	229	211	205	212	223	214	177	126
1인당GNP(달러)	1,064	1,038	943	904	923	957	910	741	573
실질경제성장률(%)	-3.7	-5.2	-7.6	-4.3	-1.7	-4.5	-3.7	-6.8	-1.1
무역총액(억달러)	47.2	27.2	26.6	26.4	21.1	20.5	19.8	21.8	14.4
수출	19.6	10.1	10.2	10.2	8.4	7.4	7.3	9.1	5.6
수입	27.6	17.1	16.4	16.2	12.7	13.1	12.5	12.7	8.8
석탄생산량(백만M/T)	33.1	31.1	29.2	27.1	25.4	23.7	21.0	20.6	18.6
전력생산량(10억kwh)	27.7	26.3	24.7	22.1	23.1	23.0	21.3	19.3	17.0
원유도입량(만M/T)	252	189	152	136	91	110	94	51	50
곡물생산량(만톤)	481.2	442.7	426.8	388.4	412.5	345.1	369.0	348.9	388.6
쌀 생산량(만톤)	193.2	164.1	153.1	131.7	150.2	121.1	134	150.3	146.1
곡물도입량(만톤)		129	83	109.3	49	96.2	105	163	103.6

북한은 농업부문 개선에 주력하여 곡물생산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북한은 1999년도 곡물생산량을 전년도 283만톤보다 1.4배 늘어난 428만톤으로 발표(11.16)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도 약 120만톤의 식량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북한발표를 정곡 기준으로 환산하면 342.4만톤으로 이것은 「국제농업기구」(FAO) 및 「세계식량계획」(WFP) 합동평가조사단의 평가 결과(347.2만톤)와 비슷하다. 또한 북한은 1999년에도 전군중적 운동 차원에서 토지정리사업과 함께 영농기반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밖에도 곡물사료가 필요없는 토끼·염소 등 초식동물의 사육을 장려하고 양어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양강도 대홍단군에서 대대적으로 재배됐던 감자는 함경남북도 등지로 재배지역이 확대되었다.

농업과 함께 북한은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간산업과 에너지부문, 첨단산업분야에 관심을 기울였다. 공업부문에서 북한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전력공업이다. 1998년에 중소형발전소 5,000여개를 건설한 데 이어, 1999년에는 각 군별 지방산업공장에까지 전력 공급이 가능한 비교적 규모가 큰 발전소 위주로 700여개의 중소형발전소 건설이 추진되었다. 동시에 북한은 그 동안 부진하였던 대규모 수력발전소의 건설에도 역점을 두었다. 강원도 안변, 자강도 송원·홍주, 평북 태천 등 10여개 지역에 대규모 수력발전소가 조성되고 있다. 북한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능력 유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언급(「조선신보」, 3.12)하였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승리자동차종합공장이 승리-58·61형, 자주-64형 자동차를 새롭게 개조(2월)하였다. 김중대전기기관차 종합기업소는 1998년에 이어 '강행군호'와 '붉은기' 전기기기관차를 제작하고 있다. 낙원기계연합기업소는 새로운 대형 유압식 굴착기(포크레인, 굴착반

경이 8.5m, 굴착깊이가 6.5m, 시간당 굴착능력이 100m<sup>3</sup>)를 제작(10월)하였다. 금속·제철공업부문에서는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 산소열병용 광로가 건설(2월)되었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 김정일의 함경남북도 공업부문 현지지도시 제시한 과업의 일환으로 설비를 대대적으로 정비·보수하였다.

화학공업부문과 관련하여 북한은 신의주화학종이연합기업소의 아류산(아황산)소다 생산기지 1단계 건설을 완공(1월)하는 한편, 홍남비료연합기업소의 설비보수 및 생산공정확장 건설에 착수하였다. 특히 1998년 5월 김정일의 소금공장 건설확대 지시 이후 소금정제공장 건설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1998년 격감하였는데, 1999년도 대외무역규모는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한 14억 달러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상반기의 대외무역액은 1998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가 줄어든 6억 6,394만 달러(수출은 11% 감소한 2억 3,152만 달러, 수입은 12.6% 감소한 4억 3,242만 달러)로 잠정 집계되었다.

1999년 상반기에는 그 동안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었던 중국과의 교역량이 근소한 차이로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식량수입이 대폭 감소한 데 기인하였다. 이 기간에 원유, 석유, 석탄 등 에너지자원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식량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요 대상국과의 교역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홍콩, 인도,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교역량은 증가하여 북한이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반영하였다.

2000년 북한은 경제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경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대외적으로 부분적인 개방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 북한은 자력갱생 논리에 입각하여 토지정리사업, 감자 증산 등을 통해 식량증산을 도모하는 한편, 에너지부문과 금속기계공업 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우선 노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북한은 해외의 식량원조 및 대외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경제특구 활성화, 해외자본 유치설명회 등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요인에 힘입어 북한경제는 1990년대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다. 사회동향

1999년 북한은 식량난으로 야기된 주민들의 불만을 억제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사상교육과 사회통제정책을 강화하였다. 특히 북한은 1999년이 김일성 사망 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체제유지에 활용하는 한편, “군대를 핵심으로 하고 혁명적 군인정신을 무기로 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밀고 나간다”는 김정일의 소위 ‘선군정치’를 선전함으로써 경제난으로 인한 군심과 민심의 이반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우선 근로자들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고 ‘사회주의 강행군’에서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각종 직능별 사회단체를 대대적으로 동원하였다. 북한은 농업부문일꾼 열성자회의(1.14~15)와 근로단체 사상사업부문 일꾼회의(1.26~27)를 시작으로 하여 농업근로자동맹 제7기 제35차 전원회의(2.3), 리단위 농공맹위원장회의(3.28) 등을 통해 식량증산을 위한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 선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대규모의 제2의 천리마대진군 선구자대회를 개최(11.3)하고, 뒤이어 각 시·도별 제2의 천리마대진군 선구자회의를 개최(11.15,

11.27)함으로써 경제난으로 와해되고 있는 농촌단위조직의 사상무장 및 조직결속력을 강화하고, 기술지도 등 식량증산을 독려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도 식량증산과 경제건설을 위해 도시주민과 제대군인들이 농촌지역으로 집단배치되었다. 감자 생산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평양·개성 등의 공장 여직공들이 '자원형식'으로 양강도 대흥단군에 진출(2월초)하였고, 제대군인 1천명이 '자원 진출'(3.13)하였으며, 검덕광산, 2.8직동청년탄광 등에도 제대군인들을 집단적으로 배치하는 행사가 개최(10.22)되는 등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한 노동력 재배치 사업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었다. 1999년 들어 주요 산업시설에 집단 배치된 노동력은 2만~2만 5,000명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청년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사회주의 강행군'에서 청년들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동원사업을 실시하였다. '남조선 노동자·농민·청년학생들의 연대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평양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연합집회'가 개최(4.26)되는 한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17차 전원회의(6.12)와 청년동맹 모범 초급일꾼대회(9.29~30) 및 전국 분주소장회의(9.30~10.1), 청년동맹 제18차 전원회의(10.30) 등이 연이어 개최됨으로써 식량문제가 어느 정도 회복기미를 보임에 따라 흐트러진 사회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졌다.

한편,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식량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선전활동과 반미교양사업이 전개되었다. 언론매체들은 가뭄·고온·냉해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하며('중앙방송', 7.6) 집중호우와 태풍 '올가' 영향으로 황해·강원·평안도, 특히 개성지역에 인명피해와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도('중앙방송', 8.5)하는 등 식량난의 원인이 농업정책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세계적인 이상기후현상 때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식량난에 대한 주

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반미교양사업을 전개하여 반미감정을 자극함으로써 경제난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여 체제결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향후 대미관계 개선에 따른 주민들의 사상적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1.1)에서 강경한 반미주의를 조장하였으며, 「로동신문」(7.27, 11.7) 사설을 통해 대미 경계심과 대결의지를 고취하였다. 대주민 반미교양사업으로는 인민문화궁전내에 설치('98.1)된 계급교양관과 증축된 신천 전쟁박물관 참관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1999년에는 1968년에 나포된 미국 푸에블로호를 원산에서 평양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추진되었다. 북한은 그 동안 미국의 사만호 격퇴(1866) 기념비를 대동강 기슭에 건립하여 반미교양 참관사업을 전개해 왔는데, 푸에블로호를 사만호 격침기념비의 바로 옆으로 이전, 참관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남한에서 발생한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을 활용하여 내부단결을 시도하였는데, 김종태전기기관차중합기업소를 위시하여 평양시 당·정·군로단체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범죄행위를 규탄하는 군중집회 및 현장집회를 각각 개최(11.22, 11.25)하였다.

또한 서해사태(6.15)와 관련하여 남한을 비판하고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동원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었다.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6.20),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열생산직장 규탄집회(6.28), 김일성종합대학 청년학생들의 한·미규탄 복수모임(6.30), 평양방직기계 공구직장 노동자들의 현장 집회((7.1) 등 노동자, 학생들을 동원하는 집회들이 개최되어 한·미 양국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고취하고 주민들의 내부단결이 시도되었다.

북한은 이와 같이 '황색바람' 차단을 위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고 체제에 대한 선전선동을 통해 주민들의 사상교양을 강화하였으나, 식

량난으로 인한 배급체계의 와해는 기본적인 사회통합력을 약화시켰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유동인구가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가운데 북한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탈북자가 1999년에만도 수백명에 달하고, 완전 탈북자가 약 1만~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가출하여 장마당과 역전, 다리밑 등에서 기거하는 꽃제비들이 20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은 비교적 물자가 풍부한 국경지역으로 몰려드는 추세여서 집단탈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2000년을 “조국해방 55돌, 당창건 55주년을 맞는 해”로 규정하고 제2천리마 진군을 통해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 발발 50주년이 되는 내년에 노근리사건을 포함한 미군의 양민학살사건을 활용하여 대남투쟁을 전개함과 동시에 이를 내부통합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일탈 증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주민의 사상이완 방지를 위해 북한은 사상교육 강화, 일탈자 색출을 위한 각종 통제장치 보완, 농민시장과 암시장에 대한 단속 증대, 중·북 국경지역 통제 등을 실시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농장·기업소 등 경제부문과 교육·보건 등 공공부문 등에 대한 국가관리체제를 복원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북한 경제상황의 호전, 남북경협으로 인한 외화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 및 계층에 대한 배급체계가 개선될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증가추세에 있던 사회일탈행위 및 탈북사태 등 전반적인 사회해체 현상은 약화될 것이다.

## 라. 군사동향

1999년 북한 군부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맹세, 경제난에 따른 사회 일탈 방지 역할, 무기현대화 및 신형무기 도입 등에 정책적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북한군은 남한 해군과의 '서해교전'(6.15) 참패로 인해 자존심에 심대한 타격을 받았고, 군의 사기 또한 매우 저하되었다.

현재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한 대내외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전시공산주의식'으로 국가체제를 운용하였다. 효율적인 통제와 동원을 위해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은 군을 국가권력의 중추로 활용하였다. 소위 '선군정치'가 김정일의 정치통치방식이 되었다. 「로동신문」, 「근로자」(6.16) 공동논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에 의하면 선군정치방식은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동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을 밀고 나가는 영도방식이다. 북한은 김정일이 정력적인 선군혁명영도로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튼튼한 군사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향후 사회주의 장성대국 건설 특히, 경제강국 건설은 선군정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일은 군을 체제유지의 주도세력으로 키우기 위해 각종 사기진잔책을 시행하였다. 첫째, 김정일은 군부대 및 군관련 행사에 거의 매주 참석하였다. 김정일은 12월 12일 현재 총 67회의 공개활동중 군부대 및 군관련 활동을 40회 실시하였다. 둘째, 군원로에 대한 우대조치가 지속되었다. 김정일은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백학림, 이용무 등 군원로들의 서열을 당중앙위원회 비서들보다 상위에 배정함으로써 군의 중요성 부각과 함께 원로예우를 통한 충성유도 정책을 실시하였다. 셋째, 군간부 79명에 대한 장성급 승진인사가 단행(4.13)되었다. 이 인사로 이병삼이 상장으로, 권옥필·김선주가 중장으로, 76명의

대좌가 소장으로 승진하였다. 특히 이병삼 상장과 중장 1명이 군정치 위원인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군통제기관에 대한 배려를 통한 충성심 유도 방안인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에도 군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으로 보인다. 넷째, 최일선 지휘관과 조직단위에 대한 위안행사가 실시되었다. 특히 「조선인민군 중대장대회」가 개최(2.27~28)되었다. 김정일은 이를 통해 경제난에 의해 열악해진 후생수준과 부정부패의 만연, 초급지휘관들에 대한 결혼불허 및 영내생활 강제 등으로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전투력 강화 및 자신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려 하였다. 또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인민군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것은 군청년동맹 사기진작을 통해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시키는 한편, 군내에서 동조직의 역할 강화와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에서의 선봉적 역할 수행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김정일의 군우대정책에 상응하여 북한군은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정일에 대해 충성을 다짐하는 군부의 대표적인 행사는 김정일 생일 57회 축하 중앙보고대회(2.15),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93.4.9) 6돌맞이 중앙보고대회(4.9), 김일성 87회생일(4.15) 맞이 경축중앙보고대회(4.14), 군창건 67돌 기념 중앙보고대회(4.24), 공화국창건 61주년 기념식(9.9), 당창건 54주년 기념식(10.10) 등이다. 이를 통해 북한군은 '김정일의 비범한 지략과 탁월한 군중시 정치 강조,' '김정일 군사업적 찬양과 군사중시 정책의 당위성 강조,' '김정일 결사옹위 촉구,' '군의기강확립과 훈련강화,' '혁명적 영군체계와 군풍 확립,' '전투정치훈련 백방으로 강화,' '군민일치 확립,' '김정일체제 결사옹위 촉구' 등이 강조되었다.

북한군은 전통적으로 경제건설에 많은 군인력을 투입해 왔다. 군부대는 주로 주요 도로나 교량 및 터널 건설, 경지정리작업 등에 동

원되었다. 특히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일탈이 증가되자 국경 및 주요 시설 경비를 군이 책임지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난이 점점 심화되면서 군에 대한 보급상황도 악화됨에 따라 인민군의 민간인 농가 약탈 사건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군민관계가 악화되자 북한은 군민일치 운동을 벌여 왔다. 이 운동을 통해 민간인이 각종 가축이나 채소를 공식적으로 군부대에 전달하는 행사를 벌여 왔다. 한 예로 원산시에서 강원도 토지정리사업의 성공적 종료와 관련 군인과 주민 5만여명이 참가하는 군민대회가 개최(4.3)되었다

한편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무기현대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북한은 최신 전투기 등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도입하였으며, 미사일 사단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은 장사정포, 잠수함정, 침투전력, 화학무기 등 불균형 전력을 중점 증강시킴으로써 경제력 저하에 따른 재래식 전력증강 둔화를 보강하였다.

또한 북한은 전투준비태세 강화 차원에서 공세전력을 전방에 추진 배치하여 전투임무 수행능력을 제고시켰다. 즉 포병과 기계화부대의 재편성·재배치, 군단 지휘통제체제 변화, 군사시설의 지하화 보강, 비행장과 방공기지 대공포 배치 조정, 비상활주로 추가 건설, 고사포 재배치, 미사일 기지 보강, 평양지역·해안방어체제 개선 등 주요 시설·지역에 대한 방어체제와 방어태세 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은 대포동 2호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하였다. 북·미 베를린합의(9.12)를 통해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가 잠정 중지되었으나, 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한의 집념은 매우 강하였다. 미사일 부대가 2개 여단에서 1개 사단 규모로 증편된 것이 그 증거이다. 「평양방송」(4.23)은 김일성의 업적을 찬양하면서 1998년 미사일 시험발사를 위해 김정일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몇 억 달러’를 소비하였음을 시인하였다. 미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의 보상과 북한체제안보가 보

장되지 않는 한, 북한은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해 온 미사일 개발을 쉽게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1999년에 발생한 서해사태에서 북한군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6월 북한은 남북차관급회담을 앞두고 대남긴장조성과 대미협상을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6.7~15)하였으나 남한의 적극대응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고 퇴각하였다. 이후 북한은 판문점장성급회담(6.15)과 해군사령부 성명을 통해 서해사태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고 '천백배'의 보복을 다짐하였다. 이후 북한은 인민군총참모부 '특별보도'(9.2)를 통해 북방한계선 무효화를 선언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NLL을 무실화하고 서해 접경지역을 국제적 분쟁수역화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2000년에도 북한의 '선군정치'적 군사우선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군사우선 정책으로 인해 군부의 상위 권력서열 유지, 군의 경제사회 분야 개입 등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체제안보적 차원에서 재래식 무기 현대화, 군사력의 휴전선 전진배치, 미사일 및 대량살상 무기 개발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대외관계 개선 및 남북경협 분위기 조성 때문에, 의도적으로 군사도발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북한의 통상적인 대남 첩보 수집, NLL 무효화를 위한 시위 등과 관련하여 우발적인 군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 2. 주요 대외관계

### 가. 북·미관계

1998년 8월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 의혹과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북·미간 긴장상태는 1999년으로 이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회담 특사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4자회담 4차 본회담(1.19~22, 제네바)과 병행하여 금창리 지하시설 성격 규명을 위한 3차 협상(1.16~17, 1.23~24)을 진행하였다. 본협상에서 북한은 3억 달러의 현금 보상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100만톤의 식량지원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사찰에 대한 보상은 있을 수 없으며 북한이 사찰에 대해 성의를 보일 경우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창리사찰에 대한 북·미회담 4차 협상(2.27~3.16, 뉴욕)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였다. 북한은 미국 대표단이 5월 금창리 시설을 방문토록 허용하고, 미국은 북한의 사찰 수용에 대한 대가로 세계식량계획을 통해서 50만톤, 미국 민간기구를 통한 씨감자 1,000톤 및 식량 10만톤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미국측 조사단은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5.20~24)한 후 당시 시점에서 핵개발 흔적이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금창리지하시설을 둘러싼 의혹은 일단락되었다.

금창리협상이 타결된 이후 제4차 북·미 미사일회담(3.29~30, 평양)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추가 발사·개발 및 수출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기존 입장대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함으로써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한편 페리 조정관은 대북 포괄적 접근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타진하기 위해서 평양을 방문(5.25~28)하였다. 페리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등 북한 고위관리들에게 한·미·일 3국이 합의한 포괄적 대북 권고안을 설명하였다. 북한은 페리의 방북활동을 신속히 보도하며 이례적으로 환대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포괄적 협상안에 대한 진의는 분명하게 표명하지 않았다.

이후 서해에서 남북한함정이 무력충돌하는 사태가 발생(6.15)하고, 북한이 사거리 4,000~6,000km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것이 포착되었다.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조짐이 가시화되자 카트먼과 김계관은 비공개 협상을 재개(6.22~23, 베이징)하였다. 그리고 6차 4자회담(8.5~9, 제네바)과 병행하여 열린 열린 미·북협상(8.3~4, 제네바)에서 미국은 북한에게 미사일 발사실험 준비를 중단하고 페리 협상안을 수용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북한은 명백한 답변을 회피하였다.

결국 베를린회담(9.7~12)에서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하는 대신 미국은 대북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미행정부는 적성국교역법, 방산물자법, 수출관리법 등 3개법에 근거하여 행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발표(9.17)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상품의 미국내 수입과 미국 상품의 북한 수출이 대부분 허용되고, 민간 및 상업용 자금의 송금과 선박과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및 화물운송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백남순 북한외무상은 제5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9.25)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북·미 고위급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사일 문제는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라는 종전의 입장을 반복하였다.

한편 베를린합의가 있는 후 페리보고서가 미 의회에 제출(9.15)되었다. 페리보고서는 북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3단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적 목표는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를 중단하고 미국은 이에 상응하여 대북 경제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일본과 한국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중기 목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계획을 완전히 중단시키고 북·미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장기적 목표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페리보고서는 이러한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방식을 취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페리보고서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시해 온 미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내 북한 자문단을 구성하여 페리 보고서에 대응하는 대북정책 보고서를 발간(11.3)하였다. 이들은 제네바 핵합의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핵무기 등 북한의 종합적인 위협은 더욱 증대됐다고 주장하며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였다.

미국과 북한은 페리 구상에 따라 포괄적 협상을 논의하게 될 고위급 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베를린 회담(11.15~19)을 개최하였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미국의 대북제재 추가 완화, 연락사무소 설치,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 중지 보장방안, 고위급 회담 실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회담의제 선정에 관한 양측의 입장차이로 이 회의는 아무 성과없이 끝났다. 이후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12.8)을 통해 클린턴 행정부와외의 대화지속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베를린합의 이후 북·미관계의 개선조짐과 맞물려서 미 국방부는 미군유해송환의 직접 거래를 원하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여 평양에서 미군유해를 직접 인수(10.25)하였다. 미국의 이와 같은 조치는 미·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2000년 북·미관계는 좀더 진전된 양상을 보일 것이다. 상반기에는 포괄적 협상을 위한 북·미 고위급회담이 개최되어 양국관계 현안이 활발히 논의될 것이며,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 중지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양측간 협상은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수출 증지의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미 의회는 북한과의 핵미사일 협상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미사일수출 중단에 대해 어떤 대가를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 미사일협상의 진전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게 체제보장과 대규모의 경제보상이 제공되지 않는 한, 북한이 미사일 연구·개발을 쉽사리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2000년에 북·미관계는 양측의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관계개선 조치를 취하겠지만 급진적인 관계개선을 이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나. 북·중관계

1999년 북한이 한·중수교 및 대미 중심외교로 인해 소원시하였던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시키려고 함으로써 북·중간 우호협력관계가 확대되었다. 북한은 식량난을 비롯한 각종 경제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원조가 필요한 상태였고, 중국 또한 북한의 대미 편향노선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북·중관계 복원의 결정적 계기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대규모 북한사절단의 중국방문(6.3~7)이었다.

김영남의 방중은 1991년 10월 김일성의 방중 이후 7년만에 있는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방중으로서 그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크다. 김영남을 위시한 북한대표단은 리평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의 회담(6.3), 주룽지 국무원 총리와의 회견(6.4), 장쩌민 당 총서기와의 접견(6.4), 탕자쉬엔 외교부장과의 담화(6.4), 츠하오티엔 국방부장과의 담화(6.4)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중국 고위층과 접촉하고, 황쥐(6.5) 상하이 당

서기를 방문(6.6)하는 등 북·중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여 주었다.

최태복(당), 홍성남·백남순(정), 김일철(군), 유미영(정당) 등 60여 명의 당·정·군 대표로 구성된 북한의 방중단은 김정일체제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한중수교 이후 소원화된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복원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경제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중국이 식량 15만톤, 코크스 40만톤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경제회복에 큰 보탬이 되었다. 북·중간 고위급회담을 통해 양측이 ‘강성대국’ 건설과 ‘중국식 사회주의’의 성과에 대해 상호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회복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대중관계 복원을 추진한 이유는 북한의 대미 중시정책에 대한 중국의 오해를 불식하는 한편,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경쟁적으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계 인사가 제외된 이유는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학습하기 위해 방중하였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대표단의 방중은 주로 정치외교적 목적을 지녔던 것으로 판단된다.

북·중관계 회복의 연장선상에서 의례적이기는 하지만 우호적인 행사들이 개최되었다. 북한과 중국은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 체결(‘61.7.11) 38도를 맞아 쌍방 주재 대사관에서 연회를 개최하는 등 상호친선을 강조하였다. 중국주재 북한대사관 연회(7.9)에는 왕광잉(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및 중·조우호협회 공동연회(7.7)에는 주창준 주중 북한대사가 참석하였다. 한편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연회(7.13)에는 양형섭 등이 참석, 양국간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38돌 기념행사에서 북한과 중국은 연회연설 등을 통해 북·중조약 체결이 쌍방간 전통적인 친선

관계 수립에 기여하였다는 역사적 의의 및 김일성과 마오쩌둥 등 쌍방 지도자간 친선에 대해 강조하고 향후 친선을 다짐하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북·러관계와는 달리 조약개정문제가 일체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약 제7조의 “본 조약은 수정 또는 폐기하는데 대한 쌍방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계속 효력을 가진다”라는 규정대로 조약은 계속 유효하게 되었다.

그리고 북·중수교 50주년(10.6)을 맞아 양국은 우의를 돈독히 하는 행사를 가졌다. 우선 최고지도부간 축전교환 및 외무장관회담 개최 등 일련의 행사를 통해 상호 친선유대가 강조되었다. 장쩌민이 김정일에게 선물을 보낸 것을 필두로 탕자쉬엔 외교부장의 방북 및 외무장관 회담(10.5), 김영남·탕자쉬엔 면담(10.6) 등이 이루어졌다. 기념연회시 북한은 중국의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 노력을 지지한다고 한 반면, 중국은 쌍방 친선협조 강화가 두 나라의 근본이익에 부합한다고 언급하였다. 북·중수교 50주년을 계기로 북·중관계는 과거의 ‘혈맹관계’에서 보통국가간의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우호협력관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대중 우호관계를 과시하는 일환으로 중국의 미사일 발사를 지지하였다. 북한은 「로동신문」(8.12) 논평을 통해 중국의 미사일 시험발사(8.2)를 ‘미·일의 군사적 결탁에 대한 응당한 조치’로 평가하면서 자신들의 미사일 재발사 문제를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로 강조하였다. 아울러 동 논설은 중국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공동개발 등 미·일의 군사적 결탁강화에 대한 응당한 조치’이며 북한에게는 이러한 자위적 조치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자주권에 속하는 미사일 문제에 대해 미국은 시비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이 중국의 미사일 발사지지 논평에 편승하여 미사일 자주권을 주장한 이유는 중국의 힘을 빌어 북한의 미사

일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외교적 결속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분야에서 북·중관계도 돈독해졌다.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 여춘석(7월)과 중국군 심양군구의 갈진봉(6월)이 상호 방문하였으며 중국 인민해방군 외사관공실 주임 톈뎬을 단장으로 하는 외사대표단 3명이 북한을 방문(8.3~10)하였다. 또한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 참전 49주년(10.25)을 기념하는 인민무력성 기념연회가 개최되었다. 이 연회에서 북한의 양형섭과 주북 중국임시대리대사 리뎬은 “선대수령들의 전통적인 친선을 대를 이어 발전”시킬 것을 다짐하였다.

2000년 북·중간에도 활발한 교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미, 북·일관계 개선에 따른 대북 영향력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여 대북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대미·일 관계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적절히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 북한 고위층의 상호방문을 통해 북·중간 우호협력관계는 한층 긴밀해질 것이다.

#### 다. 북·일관계

북·일관계는 1998년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 일본 정부가 식량지원 중단, 전세기 운항 중단, KEDO 지원 중단, 수교교섭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함에 따라 북·일관계는 거의 단절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단절상태에 있던 북·일관계는 1998년 12월경부터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 12월 뉴욕에서 북한의 이근 유엔대표부 차석대표가 일본 외무성 동북아과장과 접촉하였고, 1999년 1월경 북한의 송호경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민당의 나카야마 마사아키(中山正輝)

중의원(衆議院) 예산위원장과 접촉하였다. 아울러 오부치(小淵惠三) 총리는 1999년 1월 시정연설에서 미사일 발사위협 등이 제거될 경우 북한과 대화와 교류를 통한 관계개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베이징 주재 북·일 양국 대사관도 접촉을 하였으며, 4월 싱가포르에서는 일본 외무성의 고래시게(阿南惟茂) 아시아국장과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고위 당국자간에 수교회담의 재개 등 현안 논의를 위한 비밀접촉이 이루어졌다.

또한 오부치 총리는 워싱턴 미·일 정상회담(5.3)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한·미·일 3국이 '대화과 억지' 전략을 병행하여 공동대응하는 것에 합의하였다고 밝혔고, 회담후 가진 회견에서는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개설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오부치 총리는 한국언론계의 정치부장들과 가진 모임(5.14)에서 "앞으로 북·일관계가 정상화돼 경제협력 문제가 나오면 적극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6~7월에 접어들어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준비 동향이 포착되면서, 북·일관계는 다시 경색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일본은 대화보다 억지에 비중을 두는 정책을 전개하였다. 일본은 접근과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 정책을 기조로 군사적 역할 증대 및 군사력의 정비를 통해 대북 강경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 미사일문제에 대해 '대북 압박 외교'를 추진하였다.

이같은 일본의 대북한 강경정책에 대해 북한은 「중앙통신」(8.11)을 통해 일본이 과거청산을 통해 관계개선을 희망할 경우 기꺼이 응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일본 3원칙'을 천명하였다. 즉 첫째, 일본은 북한에 대한 압살정책을 포기해야 함, 둘째, 일본은 북한에 범한 과거의 죄에 대한 성실한 사죄와 철저한 보상을

해야 함, 셋째, 일본이 끝까지 힘의 대결로 나온다면 북한도 상응하는 대응책을 선택할 것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정부성명을 발표(8.10)하였다.

그러나 9월 베를린 미·북 고위급회담 결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유예함에 따라 북·일관계는 대화재개와 국교정상화 교섭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북·일 정부는 싱가포르에서 외교당국자간 비밀접촉(10.18~20)을 가졌고, 일본 정부는 북한-일본간의 전세기 운항 동결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11.2)하였다.

그리고 무라야마 전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초당파 방북단이 평양을 방문(12.1~3)하면서, 북·일관계는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할 수 있게 되는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일본은 북한과 첫째,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 및 예비회담 연말 개최, 둘째, 식량지원 및 일본인 처 고향방문에 대해 북·일 적십자사 및 정부수준의 협의, 셋째, 북한 노동당 대표단의 2000년 일본 방문 등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98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에 부과하였던 제재조치를 해제(12.14)하였다.

북·일의 적십자사는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2000년 상반기중 북한거주 일본인 처 고향방문 재개, 일본의 대북 식량지원, 일본인 실종자에 대한 조사 협조, 그리고 1945년 이전 조선인 행불자에 대한 조사에 대해 합의(12.21)함으로써, 수교교섭 재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2000년에 일본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및 일본인 처의 방일 실현을 계기로 북·일간 관계진전이 예상된다. 북·일수교협상은 관련 현안별로 몇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진행되고, 수교에 따른 경제적 보상금의 규모 및 제공시기 등이 논의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이견과 북한의 미사일문제는 북·일간 수교협상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 라. 북·러관계

1999년 북·러 양국은 1961년 동맹조약을 대체하는 신조약을 가조인하고 연례적인 기념행사들을 개최하였으나 고위인사들의 상호방문은 감소하였다. 북한은 러시아 및 CIS 국가들로부터 군사무기와 부품을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도입하였으며,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문제가 합의되었으나 실질적인 이행은 양국의 경제난으로 지연되었다.

북한의 이인규 외무부상과 러시아의 카라신 외무차관은 양국간의 최대 현안인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을 가조인(3.17, 평양)하였다. 신조약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폐지되고 대신 ‘안보위협 발생시 협의’ 조항이 신설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북한이 주장하였던 ‘고려연방제 지지’ 문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5월말 방북하여 북·러 신조약을 정식 조인할 예정이었으나 양국 사정으로 계속 지연되었다.

러시아와 북한은 고위급인사의 방문을 통해서 양국간 현안을 논의하고 관계진전을 모색하였다. 카라신 외무차관은 방북시(3.15~17) 백남순 외상과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및 국제적 상황에 관해 협의하고 4자회담 협상과정에서 러시아를 참여시키는 문제와 TMD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ARF 등 다양한 다자간 포럼에 대한 북한의 참여를 지지하였다.

그리고 홍성우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모스크바를 방문(4.2~7)하여 러시아 연방하원 의장과 부의장, 공산당 당수 주가노프 및 연방하원 국제문제위원회 대표 등과 면담하였다.

한편,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 의혹과 관련, 아파나시예프 주한 러

시아대사는 러시아 정부가 강제사찰에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1.28). 또한 북한 미사일 발사계획과 관련하여 러시아 정부는 이것이 미·일의 TMD 계획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동북아 긴장 및 군비경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북한은 1999년 러시아와 CIS 국가들로부터 군사무기와 부품을 합법적 및 불법적인 방법으로 구매함으로써 한국 및 주변국들의 우려를 야기하였다. 북한이 1999년 여름, 전년도에 도입한 MiG-29기 10여대의 부품 조립·생산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벨로루시로부터 탱크 19대를 구매한 것으로 보도(3.6)되었다. 또한 북한은 4월에 카자흐스탄의 비정부단체로부터 MiG-21기 34대를 구매하여, 이 중 10여대를 조립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은 MiG-21기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설계도면의 절취를 시도하였으나, 사전 발각되어 북측요원들이 강제출국(6.8)당하였다.

북·러 양국은 9년을 끌어온 국경협상을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약 17km에 달하는 북한과 러시아간 국경인 두만강 하구에는 여름철 수위가 높을 때는 물에 잠겨 보이지 않다가 겨울철 수위가 낮을 때 나타나는 지역이 산재되어 있어 양측이 국경의 기산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양국은 실무협상을 통해 2000년 2월 모스크바에서 국경획정 및 실사작업에 따른 제반 조건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2000년 4~6월 실사작업을 실시하기로 합의(10.27)하였다.

1999년에도 북·러간 교역 및 경험은 부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양국간 경제관계의 부진은 기본적으로 46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대러 채무문제 미해결, 양측의 만성적인 외환부족, 북한 무역회사들의 빈번한 계약 불이행, 러시아의 철도운송료 인상 등 교역 환경의 경색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러 양국은 모스크바에서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 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의정서에

조인(6.11)하였다.

북한의 대러 경험은 대체로 러시아 극동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네즈딜로프 나호드카 시장과 고성국 나호드카 주재 북한 총영사는 북한과 연해주 도시들 간의 경제 및 문화연계, 나호드카에 북한 건설공들에 의한 1만석 축구장 건설 문제 등을 논의(3.3)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극동의 기술자들이 작업에 착수하여 신포의 핑치 통조림 공장이 올 후반기에 재가동되었다. 총생산량의 70%는 러시아에 수출되고 나머지는 북한이 처분하도록 계약된 이 공장은 러시아와 합작으로 건설된 것으로 명태 통조림도 생산할 계획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회사들이 북한의 낮은 과세와 값싼 노동력 그리고 범죄요인의 부재 때문에 북한내에서의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998년 말로 북·러간 벌목협정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에 하바로브스크, 아무르주 등과의 벌목협정 연장문제가 타결되지 않고 있다. 과거의 경험을 볼 때 채벌목재의 분배문제 등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998년 여름 나호드카에서 3kg의 마약 거래를 하다가 검거된 북한인 2명이 연해주 법원에서 8년과 5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6.1).

북한의 어려운 식량난 때문에 박의춘 주러시아 북한대사가 1999년 초에 노보시비르스크주를 방문하여 주정부에 식량과 씨감자 지원을 요청하였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1998년 3월부터 국내정치문제로 중단된 인도주의적 원조의 재개를 결정(7.13)하여 설탕, 밀가루, 곡류 및 기타 생필품을 지원하였다.

2000년에는 양국의 사정으로 계속 연기되고 있는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이 실현되어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이 공식 조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은 세바르드나체 소련

외상의 방북('90.9) 이후 약 10년만에, 그리고 러시아연방 출범 이후 최초의 일이다. 따라서 북·러 양국은 이를 계기로 한·소수교 이후 악화되었던 과거시대를 극복하고 보편적인 국가간의 선린관계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조약 체결을 기회로 양국간 정치대화와 고위 인사 교류가 회복될 것이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 공산당이나 민족주의 정당 지도자들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군사면에서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미·일의 TMD계획을 유발시킨 면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의 발사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지속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서해교전에서의 패배로 인한 충격으로 러시아나 CIS로부터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 방법을 통해 군사무기나 부품을 반입하고자 할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경화를 지불하는 한 군사무기와 부품을 어느 나라에도 판매할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중고무기와 부품 판매는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2000년에 북한과 러시아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 공동위원회」의 재개 가능성이 크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협력 복원을 모색하는 한편, 자원이 풍부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시베리아 및 러시아 극동지역 지방정부들과의 합작사업을 중심으로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 주정부나 CIS 국가들에게 식료품과 의약품 등의 인도적 지원을 계속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 3. 대남동향

1999년도에 북한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당국간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민간협력을 통해 실리를 획득하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민족'과 '자주'를 앞세운 통일전선전술을 계속 구사하였다.

김대중정부 출범과 함께 '연북화해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남한이 국가보안법 폐지, 안기부 철폐, 합동군사훈련 중지 등의 전제조건을 이행하면 당국간 대화에 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던 북한은 1999년에 들어와 보다 구체적·직접적으로 남북회담을 제의하였다. 북한은 1999년 2월 3일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를 통해 외세와의 공조 파기, 합동군사연습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운동의 자유 보장 등의 전제조건 위에서 하반기에 '남북고위급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이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문제, 교류협력문제, 이산가족문제 등을 토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북한은 남한에게 선행실천사항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통일을 위한 접촉과 대화는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진행해도 좋을 것"이라며 대화 형식, 시기, 장소 등 제반 조건을 완화시키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북한은 남한과의 비공개접촉을 통해 이산가족문제를 비롯한 당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차관급회담을 베이징에서 개최하고, 남한은 북한에 20만톤의 비료를 제공하기로 합의(6.3)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6월 22일부터 개최된 남북차관급회담에서 서해교전사태(6.15)를 빌미로 회의를 결렬시켰다. 북한이 이같이 회담을 결렬시킨 것은 비료 확보 등 경제적 이유에서 남한 당국과의 접촉을 필요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제유지 차원에서 여전히 남북관계의 전면적 확대에는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남북대화와 동시병행적으로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미 고위급회담(6.23~24)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 관계보다는 대미 관계개선에 중점을 두는 '선미후남(先美後南)' 전술을 구사하였다.

북한은 남북차관급회담이 결렬된 후에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공개질문장(6.30),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및 조평통 공동호소문(11.1) 등을 통해 남한의 선행실천사항 이행을 계속 요구하였다. 이것은 남북 당국간 회담이 진전되지 못한 책임을 남한에게 돌리고, '자주' 및 '민족'을 내세워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통일전선 공세를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남한내의 국가보안법 개정 움직임에 편승하여 국가보안법 철폐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둘러싼 남한내 보수·혁신간의 갈등을 유발하고자 하였다.

한편 북한은 꽃게잡이 조업을 명분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기 시작(6.7)하였다. 남한 해군은 북한의 의도적·지속적인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북한함정에 대해 밀어내기식 '충돌격퇴작전'을 감행하였다. 북한함정의 침범에 대한 이같은 대응과정에서 북한함정의 선제사격으로 남북 함정간에 교전사태가 발생하였다.

서해교전은 시기·장소·방법 등의 측면에서 철저하게 계획된 다목적용의 도발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은 NLL을 침범함으로써 한반도문제가 남북간이 아니라 북·미간에 해결될 문제임을 강조하는 한편, 북·미대화에서 협상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둘째, 대남차원에서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과 정경분리원칙의 지속성 여부를 시험하고 국론분열을 도모하였다. 셋째, 북방한계선을 무효화하고 이 해역을 분쟁구역화 함으로써 영해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넷째, 어장확보와 어로활동보호를 위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군사적 긴장조성을 통해 대내결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북한은 서해교전사태를 남한의 '고의적·계획적 도발채동'으로 비난하면서 "당분간 남측 인원들의 평양방문과 접촉을 제한 또는 중지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추가적인 군사적 보복 조치를 자제하는 등 사태를 악화시키기보다는 금강산관광, 비료지원 등을 포함하여 남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리를 계속 확보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북한은 북방한계선의 무효화를 일방적으로 선언(9.2)하고 황해도와 경기도와의 경계선을 임의로 연장하여 '해상군사통제수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모든 자위권을 행사할 것"임을 주장하였으나, 또 다른 도발을 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1999년에도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을 '반북 대결정책'이라고 비난하였다. 특히 북한은 포용정책이 국제적 지지를 넓혀 가는 데 불안을 느껴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비판하고, "햇볕정책은 미국의 '평화적 이행전략'의 변종으로 화해와 협력의 미명하에 우리를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흡수통일하려는 모략채동"이라고 비난(8.18)하였다.

북한은 이와 같이 '포용정책'을 비난하면서도 경제적 실리획득을 위해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민간교류는 수용하였다. 예를 들면 북한은 남한의 민주노총 축구단을 초청, '남북노동자 축구대회'를 개최(8.12)하였으며, 현대 남녀 농구팀과 평양에서 '통일농구대회'를 가졌다(9.28). 특히 김정일은 현대 농구단과 함께 방북한 정주영 명예회장과 면담하여 서해안 경제특구 개발에 합의(10.1)하였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삼성전자와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합의하였다. 또한 북한은 대북 교역 및 협력관계를 장려하기 위한 '조선인포뱅크'라는 홈페이지를 인터넷에 개설(10월)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남한의 대중가수들을 초청하여 '2000년 평화친선 음악회'(12.5)와 '민족통일음악회'(12.20)를 개최하였다.

한편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을 북한 환경감시원에 대한 귀순 공작을 시도하였다는 구실로 억류(6.20)하였다. 이에 따라 중단되었던 금강산관광은 억류된 관광객이 5일만에 석방되고 북한당국과 현대그룹과 관광객 신변안전보장에 관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재개(8.5)되었다. 북한 당국은 이 과정에서 명분에 집착하기보다는 실리를 추구하여 사태가 악화됨으로써 금강산관광이 장기간 중단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김정일의 '통일대통령' 신화 창조를 위해 김정일이 제시한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전면에 내세워 민족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8.15에 즈음 북한은 '99 통일대축전 및 제10차 범민족대회를 개최하였다. 북한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10년만에 이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남·북·해외간의 '진정한 3자연대'가 성사되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은 당초 남북한 민간차원의 교류 활성화라는 순수한 목적하에 추진된 남북노동자 축구대회를 통일축전 관련 행사로 결의함으로써 이를 대내외 선전공세에 이용하였다. 특히 북한은 한국내 재야단체들의 참석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한편,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명분으로 통일전선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다시 한 번 나타내었다.

2000년에도 북한은 민족대단결 5대방침에 입각하여, '당국간 접촉 회피, 비당국간 교류 확대' 전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은 당국간 대화를 완전 차단하기보다는 전년도와 같이 선행실천 사항 이행 조건하에 당국간 대화를 개최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비료 획득 등을 위해 제한적이거나 남북대화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은 금강산관광사업 등 경험을 점차 확대시키고, 대외 이미지 개선 효과와 대가성이 있는 분야의 공연예술 및 체육교류를

선별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한총련 및 범민련의 합법적 활동보장, 남한의 총선을 이용한 대남정치공세 등 통일전선전술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관계를 급격히 경색시킬 수 있는 긴장조성행위를 의도적으로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 Ⅲ. 남북한 관계

#### 1. 남북대화

1999년 초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의함으로써 그 동안 중단되었던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가 커졌으나,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북한은 남한의 대통령을 비롯한 150명의 정당·사회단체 대표 및 개별 인사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당국간 대화 및 정치협상회의를 제안(2.3)하였다. 특히 북한은 그 동안 남한이 요구하였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 교류협력문제, 이산가족문제 등을 의제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언급하였으나, 선결조건으로 한·미군사훈련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범민련 활동 보장 등 남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들을 요구하였다.

북한의 남북고위급회담 제의에는 당시 금창리 지하시설 의혹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희석시키고 페리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미국의 보수적 여론을 무마하는 한편, 대북 투자 및 경험에 부정적인 남한의 보수여론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북한의 남북대화 제의에 대해 호응하는 차원에서 비료 5만톤을 북한에 제공하였다.

한편 1998년 4월 남북차관급회담이 결렬된 이후 회담재개가 관심 대상이 되었다. 남북차관급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비료지원과 이산가족문제의 연계 해결을 요구하는 남한의 상호주의입장과 '선(先) 비료 지원 후(後) 이산가족문제 협의'라는 북한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었다. 1999년 1월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다각적·신축적으로 이산가족문제를 다루어 나가겠다'며 상호주의를 보

다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남한의 김보현 총리보와 북한의 전금철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비공개접촉이 베이징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합의서가 발표되었다. '6.3합의'의 주요 내용은 남한이 1999년 7월까지 비료 20만톤을 북한에 제공하며, 그 중 6월 20일까지 10만톤을 전달한다는 것과 6월 21일부터 남북차관급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이었다. 남북차관급회담의 의제는 '이산가족문제를 비롯한 상호관심사'로 하되, 이산가족문제를 먼저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기 시작(6.7)하고 이것이 교전사태로 확대(6.15)되면서 회담분위기가 냉각되었다. 북한은 회담 개최 이틀 전(6.19)에야 회담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대북지원 비료 10만톤의 잔여분 2만 2,000톤이 북한에 수송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담을 연기하였다. 예정일보다 하루 지연된 1차 남북차관급회담이 베이징에서 두 차례(6.22, 6.26) 개최되었다. 6월 22일 개최된 회담에서 북한은 회담의제이었던 이산가족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서해사태에 대한 남한의 사과·해명을 요구하였다. 남한은 차관급회담의 주요 의제인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생사와 주소확인을 위한 명단교환, 서신거래 및 상봉문제 등 우선 가지적 조치를 실현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남한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분야별 공동위원회 가동, 남북연락사무소 기능정상화('96.11 이후 업무정지), 차관급회담의 정례화 및 고위급회담으로의 발전 등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남한은 북방한계선문제는 정전체제관리 차원에서 유엔사·북한 장성급회의에서 협의·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6월 26일 재개된 회담에서 남한은 대북지원 비료 20만톤 중 2차분 10만톤은 이산가족문제에 진전이 있을 때만 수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서해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북한의 자세는 변화

지 않았다.

제2차 남북차관급회담(7.1~3일)은 전체회의 1회, 수석대표 단독접촉 2회(7.1, 7.3)를 개최되었다. 7월 1일의 회담에서 북한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나머지 비료 10만톤과 연계시켜, 추가 비료의 첫 번째 수송이 시작되는 날 이산가족문제를 협의하자고 주장하였다. 둘째,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가 「월간조선」(7월호)에 게재한 서해사태 관련 발언을 문제삼아 남한 당국의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남측 대표단은 9월 추석을 전후해 100명 정도의 이산가족의 첫 상봉을 실시하고 그 뒤 매달 같은 규모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남한은 8월 초부터 이산가족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명단교환사업을 매달 300명 정도 실시할 것을 비롯해 우편물 교환, 판문점에 상봉면회소 설치, 9월과 10월의 고령 이산가족 각 100명의 서울-평양 순차방문 등도 제의하였다.

아울러 남한은 금강산관광객 억류사건을 계기로 남북양래 인원에 대한 당국간 신변안전보장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신변안전보장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신변안전보장문제는 현대와 아태평화위원회간 협의할 사안이며 당국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남측 대표가 북한이 이산가족문제 논의를 회피하고 의제외의 문제인 서해사태 등을 주장한다는 점을 들어 대표단 철수를 발표(7.2)하자, 동일 오후 북한은 수석대표 단독접촉을 제안하였다.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7.3)되었으나 남북한이 종전의 입장을 바꾸지 않음에 따라 차관급회담은 결국 결렬되었다.

6.3합의에도 불구하고 남북차관급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원칙, 목표, 회담 외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남북한의 입장이 상이

하였기 때문이었다. 회담원칙면에서 남한은 1998년 남북차관급회담에서 적용하였던 엄격한 상호주의대신 신축적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비료 10만톤을 먼저 제공한 뒤 남북회담을 개최하고, 이후에 잔여분 10만톤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6.3합의와는 달리 회담이 개최되자, 상호주의를 전면 배제하고 비료 20만톤 전량이 제공된 이후에 이산가족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회담목표면에서 남한은 차관급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문제, 판문점 연락사무소 기능정상화 문제, 차관급회담의 정례화 및 총리급회담으로의 발전 문제 등을 제안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를 전면적으로 재개하고자 하였다. 반면, 북한은 6.3합의에서 이산가족문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남한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한 일회성 차원에서 차관급회담에 임하였다.

차관급회담에서 남한은 서해사태와 남북회담의 분리를 주장하였으나, 북한은 서해사태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북한은 「중앙방송」(9.13)을 통해 '2.3대남제'에서 제시한 세 개의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 '쌍무적·다무적' 남북대화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백남순 북한 외무상은 미 외교관계협의회(CFR) 연설(9.27)에서 "남한이 7·4공동성명 3대 원칙을 존중하고 북한의 협상제의에 응한다면, 정상회담도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2000년 상반기중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다시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을 다시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2.3제의시 제시한 한·미군사훈련 중지문제, 국가보안법 철폐문제, 한총련과 범민련 활동보장문제 등 세 가지 선결조건을 계속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더라도, 북한이

선결조건을 양보하지 않는 한, 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낳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2000년 상반기 북한에 대한 식량·비료·농약 지원 등과 관련한 남북차관급회담이 다시 개최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북지원이 남한 내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북지원에 관한 남북차관급회담은 4월 총선 이후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남한이 상호주의 원칙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식량·비료·농약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경우, 대북지원과 연계하여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왕래, 시범적 상봉 등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추진에 의해 유리한 통일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김대중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 실현을 위해 남북최고위급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2. 4자회담

1998년 10월 3차 4자회담에서 「평화체제분과위원회」와 「긴장완화분과위원회」 구성이 합의됨에 따라 1999년에 세 차례에 걸쳐 개최된 4자회담은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평화체제분과위는 평화체제의 당사자, 평화체제의 이행과정, 평화체제 보장 등의 문제를 다루고, 긴장완화분과위는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이행조치들을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세 차례의 4자회담에서 미·북대화에 치중하는 북한의 태도는 회담진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은 4자회담 4차 회의(1.19~22)를 전후하여 미국과 금창리 지하시설문제에 대해서 협상하였으며, 4자회담 6차 회의(8.5~9)를 전후해서는 미

국과 미사일 발사문제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은 4차회담을 미국과의 관계개선 여건 조성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4차 회의에서 분과위원회 운영절차에 대해서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첫째, 분과위원회 의사결정은 전원합의제로 하기로 하였다. 둘째, 분과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는 사항은 수석대표회의에 회부되도록 하였다. 셋째, 분과위원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넷째, 분과위원회에서 자유의사를 개진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긴장완화조치를 우선 실시함으로써 평화정착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데 반해, 북한은 주한미군철수 및 북·미 평화협정의 우선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타협점이 찾아지지 못하였다. 특히 4차 회의에서 한국은 남북한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주요 군사훈련의 상호 통보, 군인사의 상호 교환방문, 스위스가 제안한 비무장지대내 인도적 회랑(humanitarian corridor)의 검토, 4차회담의 분기별 정례화 등을 제안하였다. 반면, 북한은 긴장고조의 원인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회담국간의 불평등한 지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4차회담 5차 회의(4.24~27) 및 6차 회의(8.5~9)에서도 한·미측과 북한의 입장 차이가 반복됨으로써 성과가 없었다. 한·미는 실천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신뢰구축 조치를 취하자는 점진적 입장을 견지한 반면,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및 미·북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의제화하자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였다. 이처럼 의제선정문제에서 한·미측과 북한의 입장이 평행선을 이룸으로써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였다.

2000년에 4차회담의 개최 및 성사여부는 페리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대북 포괄적 협상을 둘러싼 미·북 고위급회담의 진전과 관련되어 있다. 미·북 고위급회담이 개최되어 협상이 진행될 경우,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4자회담도 개최될 것이다. 그러나 미·북 고위급회담이 개최되면, 북한이 4자회담에는 형식적으로 임하면서 주로 미·북 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4자회담의 의제 및 접근방식에 대한 한·미와 북한의 상반된 입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4자회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북·미회담과 연결하여 그들의 기존 입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자회담에서 작은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 3. 경수로사업

그 동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부속합의서 협상, 한·미·일 3국의 비용분담 협상, KEDO·한국 및 KEDO·일본간 차관공여협정과 각국의 국내 승인, 그리고 주계약 협상 등의 지연으로 경수로사업의 본공사가 지연되었다. 경수로사업의 원래 계획에 의하면 1997년 8월부터 1년간 초기부지공사가 완료되고 1998년 8월 본공사가 착수될 예정이었다. 초기부지공사에는 7,192만 달러가 투입되어 1999년 8월 완공되었으나, 주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5차 연장공사(8.16~12.15)에 들어갔다. 5차 5차 연장공사에서는 부지 정지 외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여러 기반시설 공사가 병행 추진되었다. 특히 본공사 개시 후 예상되는 공사량과 참여인원의 대폭 증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작업, 근로자 복지시설 건설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KEDO와 한국전력간에 '주계약'이 체결(12.15)되어 경수로 본공사

가 시작되었다. 주계약을 통해 공사비와 공사분담이 확정되었다. 주계약 체결 지연과 비용분담국가에 의한 차관공여협정 등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 KEDO는 외상으로 경수로 건설비용을 충당해왔다. 한·미·일간의 재원분담 결의('98.11.9)에 따라, 총공사비 46억 달러 중, 한국이 70%인 32.2억 달러(한화 3조 5,420억원)을, 일본은 10억 달러 상당(엔화 1,165억엔)을, 미국은 부족분 발생시 그 조달에 있어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주계약에 따라 한전은 종합사업관리와 시운전 및 북한 운전요원 훈련을 담당하고, 각종 생활·기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부지운영·건설방법에 대한 책임을 맡기로 하였다. KEDO는 부지 제공과 현장인원의 신변안전 확보 및 통신수단을 제공하고, 한국전력기술은 발전소의 설계를, 한국중공업은 기자재를, 현대·동아·대우·한중 등 국내기업들은 시공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ABB, GE, 미쓰비시, 히타치 등 미국과 일본 업체들도 부품공급 등을 맡는 하청업체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경수로 재원분담 결의에 의거하여 한국정부와 KEDO간, 일본정부와 KEDO간 차관공여협정이 각각 발효(8.19, 7.15)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정부는 앞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KEDO에 3조 5,400억원을 원화로 무이자 장기융자하며, KEDO는 그 원리금에대한 법적상환 책임을 진다. 원리금은 경수로 완공후 3년거치 포함 20년간 연 2회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상환방법은 현금상환이 원칙이지만 한국정부의 동의시 현물 상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이 부담해야 되는 총비용 3조 5,000억원은 건설기간을 9년으로 잡으면 연간 4,000억원 정도이다.

경수로 비용의 국내 조달을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이 개정되었다(5.25). 한국 정부는 이미 전기요금에 법정납부금을 부과 징수하여 경

수로 비용을 조달하기로 결정('98.10)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은 전기료 3%의 법정 납부금을 징수하여 이를 KEDO에 융자하기로 하였으나, 1999년도에 필요한 경수로 재원 3,3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기로 결정하였다. 전기료에 법정 부과금을 징수 하는 시기는 경제요건이 호전될 때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징수 기한은 5년 시행후 존속을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1999년 12월 15일 현재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다.

한편 미국의 대북 중유공급은 미 의회의 제동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미 하원은 대북 중유공급 예산 3,500만 달러를 전액 삭감('98.9.17)하였다. 이 예산은 1999회계년도에는 부활되었으나 북한이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었다. 또한 미·북 제네바합의 이행, 미사일 개발 및 수출 저지를 위한 만족할 만한 성과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미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었다. 5월 금창리 일대에 대한 사찰 결과, 금창리시설이 당시 시점에서 핵시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대북 중유제공의 장애요인이 제거되었다. 따라서 1999년 11월 초 현재 대북 중유제공 분량인 50만톤은 예정대로 제공되었으며, 미·북 제네바합의 이후 미국이 북한에 제공한 중유는 총 215만톤에 이른다.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움직임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7월경 일본 정부는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하면 대북 경수로건설비 분담금 제공을 중지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하더라도 KEDO에 의한 경수로 지원사업은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던 한·미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었다. 1998년도에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제재조치(북·일 수교교섭 중단, 대북 식량지원 동결, 전세기 운항 중지 등)

를 취하고 경수로사업 재정분담 서명을 보류하기도 하였다. 미국 등의 설득으로 일본은 동 문서에 서명('98.10.21)하였다. 9월 북·미 베를린 합의에 의해서 북한이 추가 발사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자 일본은 대북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경수로사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KEDO와 북한은 경수로 공급협정의 시행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후속의정서 협상을 벌여 왔다. 현재까지 6개 의정서의 체결이 완료되었고 2개 의정서의 협상이 진행중이며, 7개 의정서에 대한 협상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 1999년 1월과 4월 훈련의정서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북한 경수로 건설과정상의 안전관리를 맡는다는 발표(6.17)가 있었다.

2000년에는 경수로 본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이에 따라 남북한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예를 지속하는 한, 미국의 대북 중유지원이 안정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수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일도 많다. 특히 10억 달러를 부담하는 일본수출입은행과의 건설비용 용자계약도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하였고, KEDO 이사국과 관련있는 기업들이 경쟁하는 주요부품 구매계약도 KEDO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또 북한과 벌이게 될 원전 운용요원 훈련과 사용후 연료 등 7개 의정서 협상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 4. 교류·협력분야

##### 가. 경제분야

###### <남북교역>

1999년 남북교역은 IMF관리체제의 영향을 받은 1998년에 비해 크게 활성화되었다. 1997년을 정점으로 총 3억 834만 달러에 달하였던 남북교역은 우리의 전반적인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환율상승, 경기침체에 따르는 내수 위축 등으로 1997년에 비해 28%나 감소된 1998년 2억 2,194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9년에는 다시 증가세를 회복하여 10월까지 총 2억 8,768만 달러로 전년 동기 1억 7,900만 달러에 비해 59.7% 신장하였다.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하였던 1997년 동기보다 3.9%나 증가함으로써 1999년의 남북교역규모는 3억 2,000만 달러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교역에서는 반출이 차지하는 비중(67.2%)이 반입 비중(32.8%)보다 훨씬 높은 특징을 보여 주었다. 전체 교역에서 반출이 반입보다 높은 현상은 1998년(반입 41.5%, 반출 59.5%)에 이어 계속되었다. 이것은 대북 증유지원, 비료지원, KEDO 경수로건설과 금강산관광개발을 위한 기계류 및 임가공용 원부자재 및 설비의 대북 반출 등 비거래성 물자교역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간의 실질교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성 교역은 1999년 10월 기준 총 1억 5,068만 달러(반입 9,428만달러, 반출 5,641만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 29.4%(반입 26.4%, 반출 34.8%)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역액의 52.4%를 차지하였다. 반입물량의 증가는 위탁가공교역 물품과 북한 농수산물의 반입 증가에 주로 기인하였지만 반출에 비해 소폭증가에 그친 것은 북한에서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와 양이

한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998년 이후 남북교역은 교역수지상 남한이 흑자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명목수지일 뿐, 실질수지는 여전히 적자상태라고 할 수 있다. 1999년의 경우 실질수지는 10월말을 기준으로 3,787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표 III-4-1> 남북한 교역 동향

(단위: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건수	품목 수	금 액	건수	품목 수	금 액	건수	품목 수	금 액
'89	66	25	18,655	1	1	69	67	26	18,724
'90	79	23	12,278	4	3	1,188	83	26	13,466
'91	300	44	105,719	23	17	5,547	323	61	111,266
'92	510	76	162,863	62	24	10,563	572	100	173,426
'93	601	67	178,167	97	38	8,425	698	101	186,592
'94	827	73	176,298	495	92	18,249	1,322	159	194,547
'95	1,124	105	222,855	2,720	174	64,436	3,844	265	287,291
'96	1,648	122	182,400	2,980	171	69,639	4,628	280	252,039
'97	1,806	140	193,069	2,185	274	115,270	3,991	385	308,339
'98	1,963	136	92,264	2,847	380	129,679	4,810	486	221,943
'99.1 ~10	2,392 (1,561)	162 (117)	94,399 (74,616)	2,863 (2,339)	368 (338)	193,283 (104,427)	5,255 (3,800)	488 (432)	287,683 (179,043)

주 1: ( )안은 1998년 동기실적임.

주 2: 1995년 교역금액에는 대북 쌀지원 237,213천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반·출입 품목 구성을 보면, 10월말을 기준으로 반입에 있어서는 섬유류와 전년도보다 규모면에서 크게 증가한 농림수산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섬유류의 반입은 전체의 38.9%를 차지하여 전년 동기 기준 43.8%에 비해 그 비중이 줄어들었으나 규모면에서는 12.3%가 증가하였다. 농림수산품은 전체의 36.5%를 차지하여 전년 동기 21.7%와 비교할 경우, 비중면에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규모에서도 112.5%의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반출에 있어서는 비금속광물(25.5%), 화학공업제품(21.8%), 섬유류(15.7%),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13.1%)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비금속광물에서는 방카 C유가 전체 반출의 20.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화학공업제품에서는 전체 반출의 19.8%를 복합비료 및 유안, 요소비료 등이 차지하였다. 이는 대북 경수로 건설과 관련된 중유지원 및 대북 지원 비료공급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교역물품의 승인조치와 관련하여 '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일부 조정하였다. 승인을 요하였던 품목에서 민어(냉동)를 제외시키는 대신, 국내산업피해를 구제하고 방역, 생산자보호 및 부정반입 행위 예방적 차원에서 포켓용 라이터 2품목과, 벗짚, 꽃게 2품목 등 4개 품목을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추가시켰다. 이로써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고시된 품목 수는 종전 178개에서 182개로 늘어났다.

교역업체 및 교역품목 수도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1998년에는 378개 업체로 전년 442개 업체보다 14.5%가 줄어들었으나 1999년에는 10월까지만 하더라도 490개 업체가 남북교역에 참여해 29.6%의 증가세를 보였다. 교역품목은 1998년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여 1997년의 385개품목에서 486개 품목으로 늘었으며 1999년에는 10월 기준으로 488개 품목에 달하였다.

### <위탁가공>

위탁가공교역의 경우에도 1997년의 회복세를 넘어 1999년 10월 말 현재 8,271만 달러를 기록하여 연말까지는 1억 달러 규모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탁가공교역은 전년 동기 대비 38.3%의 증가세를 나타냄으로써 전체 교역중 28.8%(3,622만 달러)를 차지하였다. 위탁가공교역 품목은 섬유류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입의 경우에는 전체 위탁가공교역의 82.2%, 반출의 경우에는 69.6%를 차지함으로써 위탁가공교역에 있어 섬유류 가공 편중 현상은 계속 이어졌다. 남북한 위탁가공교역은 북한의 저임금을 활용하여 직물을 반출하고 제품을 반입하는 전형적인 선후진국간의 교역형태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위탁가공교역 참여업체 및 교역품목의 수에 있어서는 그 증가세가 두드러져 위탁가공교역의 전망이 밝아졌다. 1998년 72개 업체(1997년 48개 업체)에서 1999년 10월 130여개 업체로 증가하였으며, 품목도 1998년 144개 품목(1997년 98개 품목)에서 1999년 10월까지 169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한편 정부는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8.11)하여 위탁가공 원부자재 및 그 생산품의 반출입과 관련하여 거래형태가 임대 또는 무상인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의 개별 승인 없이 반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I-4-2> 위탁가공교역현황

(단위: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89	0	0	0
'90	0	0	0
'91	0	0	0
'92	638	200	839
'93	2,985	4,023	7,008
'94	14,321	11,343	25,663
'95	21,174	24,718	45,892
'96	36,238	38,164	74,402
'97	42,894	36,175	79,069
'98	41,371	29,617	70,988
'99.1~10	44,078	38,631	82,709
	(34,308)	(25,510)	(59,818)

\* 주 : ( )안은 1998년 동기실적임

<경제협력>

남북한간 경제협력 사업에 있어서 1999년은 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그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4월 남북경협활성화 조치에 따른 절차 간소화 등 경협 추진의 여건이 개선되었으나 6월의 서해교전과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 등은 북한이 개방하고 있는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억제하기도 하였다. 금강산관광사업은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전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반면에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대기업 중심의 특정사업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바뀌었으므로 다른 소형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드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1999년 1월에는 (주)해주, 8월에는 (주)평화자동차가 신규 협력사업자로 승인을 받았다. (주)해주는 북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를 위해 광명성총회사와 합작으로 남한이 선박 및 어로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이 어로작업 및 보관, 냉동창고 등을 시설 운영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중이며, 사업기간은 5년이고 규모는 299만 달러에 달한다. (주)평화자동차는 자동차 수리 및 조립공장 건설을 위해 조선련봉총회사와 합영(회사명: 평화자동차총회사)으로 총 3억 달러(1단계: 580만 달러) 규모의 협력사업을 계획하였다.

이와 같이 협력사업자 승인은 1999년 2건이 추가되는 데 그침으로써 1997년 16건, 1998년 13건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현재까지 승인된 경제협력사업자는 모두 42건에 달하고 있다. 협력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은 1999년 10월 말 현재 모두 15개 사업이나 1999년에는 한 건도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1999년에는 현대의 금강산사업(1.15), 국제옥수수재단의 농업협력사업(3.25) 및 한국전력의 경수로 건설지원사업(8.10)의 협력사업 내용이 변경 승인되었다.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은 합영에서 단독투자자로 변경되었으며, 국제옥수수재단의 농업협력사업은 신품종 슈퍼옥수수 개발을 위해 사업규모를 확대하였다. 한국전력의 사업은 경수로 지원사업 금액이 4,500만 달러에서 1억 1,430만 8,000달러로 변경 승인되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개발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관광선 사업에서 호텔, 해수욕장, 온천장, 스키장 등의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투자금액도 9,583만 달러에서 북한측 투자분 450만 달러를 인수함으로써 1억 33

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사업대상 지역도 내금강지구, 통천지구, 시중 호지구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토지 및 시설물 이용권을 비롯한 30년간의 장기 독점개발권을 현대가 확보하였다. 국제옥수수 재단의 사업은 북한측 경험 상대자가 농업과학연구원에서 농업과학 원으로 변경되었고 사업규모도 30.9억원에서 110억원으로, 사업면적도 1,000ha에서 1만ha로 확대되었다.

기타 경제협력사업 분야에서는 그 동안 사업이 중단되었던 태창의 금강산 샘플개발 합영사업과 「녹십자」의 혈전증 치료제 합작사업이 재개됨으로써 2000년 초에 본격적인 생산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광명성총회사와 남북한 공동상표를 부착한 담배를 생산·판매하기로 합의(10.29)하였으며, 현대아산과 일신화학이 조선금강산관광총회사와 고성군 온정리에서 야채를 생산하여 금강산 사업소 및 관광선에 납품하는 농업협력사업을 착수하였다.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사업 승인 건수의 부진요인은 북한이 정부를 배제한 민간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태도를 견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남북한간에 거론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현대와 북한 아태평화위원회측의 서해안 공단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정주영 명예회장과 김용순 위원장의 본 사업에 대한 합의서 체결(9.28) 이후 후보지 확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공단부지가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북한이 본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I-4-3> 남북협력사업 승인 업체('99.11 현재)

기업	사업내용	금액(만달러)	승인일
대우	남포공단 셔츠·가방·자켓등 3개사업 * '96.1.26 민족산업총회사 설립 * '96.6월 투자자금 송금	512	'95.5.17
태창	금강산 생물 개발	580	'97.5.22
한국통신	북한 경수로 건설을 위한 통신지원사업	.	'97.8.1
한국전력	경수로 건설 지원사업(PWC)	4,500→ 5,346	'97.8.16 '98.10.16 (변경승인)
한국외환은행	경수로 사업부지내 은행점포 개설	.	'97.11.6
녹십자	혈전증 치료제(유르키나제) 제조사업	311	'97.11.14
(주)아자커뮤 니케이션	북한풍경 인쇄·TV광고 및 기업 홍보용 영상물 제작	편당 25	'98.2.18
미홍식품산업사	북한수산물 채취·가공양식 및 판매	47	'98.3.3
국제옥수수 재단	새품종 생산력 검정시험 및 재배적지 확 정, 신품종 슈퍼옥수수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30.9억원 (220)→ 110억원	'98.6.18 '99.3.25 (변경승인)
두레마을 영농조합법인	합작농장 운영 및 계약재배사업	200	'98.7.27
태영수산 /LG상사	가리비 양식·생산 및 부대사업	65	'98.8.28
(주)코리아랜드	북한 부동산 개발(임대·분양) 및 건설팅업	60	'98.8.28
(주)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산업 현대아산 ('99.2.25)	○금강산 관광사업('98.9.7) ○금강산관광개발사업로 확대('99.1. 15) - 제1단계('98~'99. 6) - 부두, 휴게소, 공연장, 식당, 매점, 온 천장 등 설치	9,583→ 1억 33 ( '99.1.15) *북측투자분 450 인수 (합영→ 단독투자)	'98.9.7 '99.1.15 (변경승인)
백산실업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급, 표고· 느타리·진주 등 버섯류 생산·수출	81	'98.10.28
현대전자산업 한국통신 은세통신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 (1단계 : 온정리~장전간 통신선로 매설, 제3국 경유 남북간 통신망 구축 및 운영)	13 (1단계)	'98.11.11

\* 자료: 통일부

정부는 제60차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개최(10.21)하고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의결하였다. 본 지침에 따라 대북투자 및 교역을 비롯한 위탁가공 분야에서 시범적·전략적 사업과 경험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범위(대출이자율 6%, 대출기간 7년 이내)는 소요자금의 50% 내의 원화표시 자금으로 하되, 소요자금에서 지원방침 결정 전 자기자금이나 북한 또는 제3국 금융기관의 용자 등으로 조달한 투자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2000년 남북 경제교류·협력은 첫째, 위탁가공교역을 제외한 일반 교역은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증가가 예상된다. 일반교역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원인은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외화부족 이외에도 남북 교역에 있어 물류비용이 과도하다는 점이다. 둘째, 대북 위탁가공교역은 소폭 증가할 것이다. 고물류비와 환율상승에 따른 임금상승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증가폭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비거래성 교역의 반출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경수로 본공사의 시작에 따라 물자의 반출이 증가할 것이고 금강산관광사업에 따른 설비 및 물자의 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서해공단 조성사업이 시작될 경우 이에 필요한 물자의 반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서해공단건설사업 등 남북경협 사업에서 새로운 장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남한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저리용자가 민간기업에 이루어짐으로써 대북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나. 사회문화분야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증가추세를 보여 온 사회문화교류는 건수

로는 1998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북한지역 방문을 통한 체육 및 문화예술교류 등 내용상 과거에 비해 진전된 의미를 지니는 교류·협력이 성사되었다. 금강산관광사업 1주년을 맞은 1999년 11월 현재 금강산관광을 다녀온 인원이 14만명을 상회하는 등 교류·협력의 양상이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는 사회문화분야의 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났다. 특히 서해상에서의 남북간 군사적 충돌과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 등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변화에 따라 단속적으로 진행되어온 과거와는 다른 특징을 나타내었다.

1989년 6월 이후 1999년 9월까지 남북주민간의 접촉건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사회·문화부문의 남북간 교류·협력의 대략적인 추세는 교육·학술(145건, 1,911명), 종교(111건, 867명), 문화·예술(85건, 675명), 체육(57건, 517명), 언론·출판(53건, 146명), 관광(실무분야, 47건, 145명), 과학·환경(42건, 278명) 순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치는 금강산 관광객이 압도적으로 많아짐으로써 새로운 해석을 필요로 한다. 비록 북한주민의 경우 소수의 선별된 인원들이라는 측면이 있으나, 남한주민의 다수가 북한지역을 수시로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남북 인적 교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금강산 관광객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북한주민에게서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1999년의 경우(9월말 현재) 사회문화부문에서 남북한 주민접촉이 성사된 건수는 종교(17건), 문화·예술(17건), 체육(13건), 교육·학술(12건), 관광(실무분야, 6건), 언론·출판(8건), 과학·환경(5건) 등으로 건

수로는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종교분야의 경우 남북한과 일본 종교계대표들이 베이징에 모여 (4.25~27) “한반도의 남북통일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을 주제로 ‘베이징 종교인 평화모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통일을 위한 종교인의 활동을 촉구하는 ‘1999년 베이징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전년도와 같이 남한 종교인의 북한주민 접촉과 남한 종교인의 방북이 이어졌다. 김명기·은희곤 목사 등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부연회 대표단 6명이 방북 (5.18~25),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평양 제3의 교회 설립방안 및 평양신학교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선·명진스님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도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의 초청을 받아 방북(5.25~6.1)하였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원에서 불교계 대표가 공식 방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천도교는 베이징에서 북한의 조선천도교총과 ‘남북 천도교 지도자회담’을 갖고 동학혁명 전적지 남북공동조사와 남북한 천도교 공동사업 논의를 위한 상설협의기구를 만들기로 합의(8.24~26)하였다.

1999년의 문화·예술분야의 특기할 만한 사항은 전년도 리틀엔젤스의 평양공연에 이어 빌 클린턴 미대통령의 동생 로저 클린턴과 남북한 인기가수가 출연한 가운데 평양의 봉화예술극장에서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가 평양에서 개최(12.5)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의 CNN은 이 공연을 보도하기 위해 홍콩 지사장을 북한에 파견(11.30~12.7)하고 공연과 로저 클린턴의 방북일정 등을 주요 뉴스로 다루었다. SBS는 코래컴과 북한 아태평화위원회가 개최한 공연실황을 녹화, 방영(12.10)하였다. 로저 클린턴 콘서트 형식으로 성사된 이번 공연에는 남측에서 패티김과 태진아, 설운도, 잭스키스, 핑클 등이 참가하였다. 또한 권옥연(76. 예술원 회원) 등 미술계 인사 11명이 김용순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의 초청을 받아 방북

(8.31~9.7)하여 금강산, 묘향산, 평양 등 북한산하를 방문하였다. 이들의 방북은 원로 중견 문화·예술계 인사가 분단후 처음으로 대거 평양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동안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해 북한 풍경이 일부 소개되기는 하였으나, 정부 승인하에 화가들이 대규모로 방북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 외에 기획사인 SN21엔터프라이즈의 남북대중음악회,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의 종합공연 형식의 통일음악회 등도 추진되는 등 내용면에서 과거보다 진전된 문화·예술교류가 진행되었다.

교육·학술분야의 경우 예년과 같이 주로 제3국에서의 교류·협력이 추진되었다. 서해교전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남북한 청년학생들이 중국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남북한 청년학생 203명(남측 143명, 북측 60명)은 베이징에서 제5차 남북청년학생 통일세미나를 개최(7.25~29)하고 “통일조국 창건을 위한 청년의 역할”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 세미나에는 남측에서 세계평화청년연합~전국대학원리연구회 회원과 교수들이 참석하였고, 북측에서는 각 대학 학생들과 교수진, 그리고 김정철 조선아태중앙위원회 지도원 등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또한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남북한의 환경전문가간의 학술 교류(9.27)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는 북한의 장준갑 국토환경보호성 산림보호연구소 부소장과 남한의 대북 임업지원단체인 평화의 숲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북한은 산림녹화를 위한 각종 자재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남북한 학술공동연구의 시금석으로 주목을 모았던 ‘제4차 우리말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8.13~15)가 중국 연변에서 열렸다. 남북한 학자들은 5년여를 끌어온 남북한 컴퓨터용어 통일사전을 마무리하고 연변 우전국 국제회의장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출간된 남북한 컴퓨터용어사전은 ISO(국제표준어기구)2382조항을 기본으로 남북한학자가 합의한 컴퓨터용어 표제어 2,500여개와

해설을 담고 있으며, 한·중·일 3개 국어로 색인을 마련하였다. 국어정보학회측은 2000년에도 연변 이외의 지역에서 우리말 문자의 정보화 문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 계획으로 있다.

1999년의 체육교류는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왕래교류가 이루어지는 등 내용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현대의 남녀농구단이 방북(9.28~29)하여 남북친선농구대회인 '통일농구경기대회'에 참석하였다. 남북이 체육교류를 가진 것은 서울에서 남북통일축구를 개최('90.10)한 후 9년만의 일이다. 남북은 이를 계기로 6개월마다 농구 외에도 배구, 탁구 등 체육교류종목 수를 확대해 정례적인 남북 친선교환경기를 개최기로 하였다. 또한 민주노총이 평양에서 개최된 통일염원 남북노동자 축구대회에 참가(8.16)하였다. 분단 이후 남북 노동자간의 첫 축구대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 겸 국제축구연맹(FIFA) 부위원장은 아·태평화위원회의 초청으로 방북(11.15~18)하여 2002년 월드컵축구 분산 개최와 남북축구 교환경기 및 다이너스티컵 국제대회를 대체할 극동 4개국대회 창설 등 주요 관심사를 논의하였다.

방송·언론분야에서는 1998년에는 신문사들의 방북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99년에는 평양에서 거행된 통일농구단의 시합이 녹화 또는 생중계방식으로 남한에 방영되는 등 방송교류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비록 북한이 PAL 방식으로 촬영한 화면을 NTSC 방식으로 전환해 남한에서 받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방송교류가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SBS도 평양의 봉화예술극장에서 개최된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12.5) 공연실황을 북한 조선중앙TV의 중계차 등을 이용해 녹화, 방영(12.10)하였다. 또한 정부가 북한 위성TV방송의 국내 시청을 허용한다고 발표(10.22)한 것도 방송교류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따라 언론사는 북한 위성TV방송을 독자적으로 수신,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일반인들은 지름 3m 정도의 접시 안테나와 '컨버터'(변환장치)를 설치하면 북한 방송을 볼 수 있게 되었다.

1998년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추세 속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이 성사되고 첫 유람선이 출항('98.11.18)하면서 북한지역에 대한 일반주민의 관광이 시작되었다. 관광 1년째인 1999년 11월까지 14만명 이상의 남한 일반주민들의 관광목적상 방북이 실현됨으로써 사회문화교류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사업은 향후 사회문화교류 전 분야에 걸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현대와 북한 아·태평화위원회간 남북체육교류 활성화 합의와 관련하여 평양에 실내체육관 건설이 추진중이고, 현대농구단의 방북경기 성사와 아울러 향후 확대방안이 논의됨으로써 체육교류도 보다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1999년 양적인 측면에서 다소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다. 특히 상반기에는 체육, 종교, 과학, 환경 분야의 방북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활발한 교류를 보였던 교육·학술, 문화·예술, 언론출판 분야의 인적 왕래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1999년에도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는데, 방북 등의 성과로는 연결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북한이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실익이 적은 분야의 교류·협력을 기피하는 등 제한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교류·협력실적이 부진하였던 1999년 상반기중에도 3개의 단체가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으며, 협력사업도 1건이 승인되었다. '99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체육 및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왕래교류 및 상징적인 협력사업이 성사됨으로써 질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에 비해 한층 진전된 모습을 보였으며, 분야가 보다 다양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0년에도 '보다 많은 접촉·대화·협력'을 추구하는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민간분야의 교류·협력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가 유지될 것이다. 또한 금강산관광사업이 안정적 궤도에 진입함으로써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확산에 대한 긍정적 환경조성이 예상된다. 2000년에는 사업성이 있는 문화·예술교류와 축구·농구 등 체육교류는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일농구대회의 재개, 현대의 평양체육관 건설추진 및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논의 등과 관련 체육분야의 구체적인 성과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보다 진전된 형태로 다양화되는 가운데 금강산관광사업과 연계한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은 외부사조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동요 및 체제 위기 심화를 우려하고 있고,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경제적 측면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은 교류·협력 활성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선별적으로 응하는 한편 점차 과도한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 5. 인도주의 사안

### 가. 인권문제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1998~99년도 「세계자유상황평가서」(12.4)에서 북한에는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요소마저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자유수준을 세계 최하위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경제난·식량난의 심화로 인한 식량배급의 절대부족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

존권마저 극도로 위협받는 최악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강행군 자력갱생'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주민들이 정부의 배급을 기대하지 말고 식량을 자체 해결하도록 방치하여 왔다. 자력갱생을 국가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차원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많은 기관·단체들은 수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1994년 이후 북한에서 엄청난 수의 아사자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한다.

경제난의 심화로 인해 의료실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의약품이 부족하여 병원은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는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며, 주사기와 체온계 등 기본적인 진료기구조차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자 자신이 의약품을 장마당에서 구매 와야 하는 경우도 많다. 최소한 100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70여개의 결핵요양소에서는 난방이 안되어 환자들이 귀가하는 경우도 많다. 경제난의 여파로 수질이 오염되어 파라티푸스, 콜레라 등 전염병 뿐만 아니라 결핵감염률도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내부의 생존조건이 악화됨에 따라 중국으로의 탈북행렬이 지속되었으며,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좋은 벗들」이 약 5개월간('98.11.6~99.4.3) 동북 3성 29개 시·현에 속한 2,479개 마을을 대상으로 탈북자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단체는 조사대상 지역에만 탈북자가 최소 14만명, 최대 20만명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떠돌아 다니는 꽃제비를 포함하면 중국내 탈북자 수는 3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재외탈북자들은 항상 단속을 피해 숨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노동착취, 건강파괴 등에 시달리고, 인신매매, 절도, 강도, 살인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도 노출되었다.

이들이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불안요인은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인데 「좋은 벗들」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시점까지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자 수는 연변지역 1,857명, 동북 3성지역 584명에 이른다.

탈북자중 국내 입국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999년에는 136명(12.10 현재)이 입국하였는데 전년도 70명에 비하면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지속되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공개처형에 대한 특별보고서('97.1.22) 및 유엔인권소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안('98.8.19)에 이어 유럽지식인 21명이 「북한선언문」을 발표(3.10)하여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전세계 지식인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은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연설(3.25, 제네바)에서 탈북자문제를 한국정부의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 제기하였다.

「북한주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민간차원에서 최초로 “북한인권-난민문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제회의를 개최(11.3~5)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사회의 폐쇄성,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여전히 묻혀져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미사일문제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내 인권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북한의 위협적 행동을 억제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보였다.

2000년 북한체제의 특성상 북한인권문제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생존권의 위협은 지속될 것이고 의료실태는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1999년도 곡물생산량의 증가와 국제사회의 지원 등으로 식량사정이 약간 호전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건위생이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영양실조와 질병에 의한 사망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개처형은 국제사회의 압력 뿐만 아니라 사회통제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모방범죄의 증가, 처형자에 대한 동정심 및 당국에 대

한 반발심 유발 등 오히려 역효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북한당국의 판단 때문에 점차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미국, 일본, 서구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의식하고 인권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 나. 대북지원

국제사회는 1995년 6월 이후 1999년 말 현재까지 14억 3,771만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을 실시하였다. 1999년 국제사회는 유엔기구를 통한 통합지원(5억 7,956만 달러), 개별국 직접지원(4억 316만 달러), 민간기구를 통한 지원(9,462만 달러) 등의 방식으로 대북지원을 하였다.

대북지원에서 남한 정부와 국내민간단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내지원액은 3억 6,037만 달러로 전체 대북지원액의 25%를 차지하였다(<표 III-5-1> 및 <III-5-2> 참조). 정부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 동참하여 지난 4년 반 동안('95.6~99.10.31)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유엔아동기금(UNICEF),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해 총 3억 97만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을 실시하였다. 1999년에도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모두 4,444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하였다. 지원품목은 정부가 지원한 비료를 포함하여, 옥수수, 밀가루, 씨감자, 의류, 의약품, 의료기구, 엠블런스 등으로 다양하다.

정부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창구다원화를 허용(2.10)하였다. 정부는 이미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발표('98.3.18)하였고, 대한적십자사는 지원절차(대북전통문 발

송, 표기 부착)를 담당하고, 민간단체는 물품구매, 운송,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역할분담하에 민간단체의 개별지원을 허용('98.9.18)하였다. 그러나 적십자사로의 창구단일화는 소량 적기지원을 어렵게 하였다는 지적이 있었고, 민간단체는 북한과의 직접접촉을 요구해 왔다.

창구다원화는 사전에 특정 민간단체를 유일창구로 지정하는 방식을 바꾸었다. 그리하여 각 단체가 대북지원을 위해 반출 승인 신청을 할 경우, 준법성, 전문성, 분배투명성 확보 능력 등을 개별 검토하여 대북지원이 허용되었다.

창구다원화 시행 이후 여러 단체가 대북지원을 독자적으로 실시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포함하여 한국JTS, 천주교민족화해위원회, 한국이웃사랑회, 북한동포후원연합회, 한국로타리총재단, 월드비전, 유진벨프로젝트, 국제옥수수재단 등 9개 단체 등이 활동하였다. 이 단체들은 의류, 식량 등 총 253만 달러 상당을 지원하였다. 창구다원화 시행 이후에도 대한적십자사 창구를 통해 총 16개 단체가 약 167만 달러 상당을 지원하였다.

대북지원량은 내년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간지원 단체의 자율성과 동포애에 바탕을 둔 인도주의 정신을 존중하여 대북지원을 조건 없이 허용할 것임을 밝혔고 20여개의 대북지원단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개발 및 보건의료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량 등 일회성 지원보다는 식량난의 근원적 해결을 돕기 위해, 대북지원 민간단체협의기구가 발족(4.29)하였다.

<표 III-5-1> 국제사회의 대북지원('95.6~98.11.31)

(단위: 만 달러)

		시기	지원규모	경유기구	비 고
한 국	정부	'95 ~98	27,272	유엔기구 등 직접지원	쌀·곡물 등
		'99	2,825	직접지원	비료 11.5만톤
		소계	30,097 (2,607억원)		
	민간	'95.9 ~98.12	4,321	국제적십자연맹 대한적십자사	옥수수·한우 등
		'99.1~	1,619 (194억3,344만원)	대한적십자사 독자창구	곡물 등
소계	5,940 (666억원)				
국 제	UN 기구	'95.9 ~98.12	41,765		
		'99.1~	20,263		
		소계	62,028		우리측 4,072 제외시 57,701
	국제 적십 자사	'95.10 ~98.12	3,777		
		'99.1~	420		
		소계	4,197		우리측 496 제외시 3,701
	개별 국가	'95.9 ~98.12	25,216		
		'99.1~	15,100		
		소계	40,316		한국 제외
	NGO	'95.9 ~98.12	5,689		
'99.1~		72			
소계		5,761		한국 제외	

\* 당시 환율 적용, 국제사회 지원은 발표 기준

<표 III-5-2> 1999년도 대북지원

(단위: 만 달러)

		규모	비 고
한 국	정부	2,825	- 비료 11.5만톤 직접지원 * 339억원(1달러당 1,200원 적용) * 한적 및 당국간 비교지원(3.30~6.22) 총 15.5만톤 462억 원
	민간	1,619	○ 한적 비료지원(3.30~6.5): 4만톤 123억 3,300만원 ○ 한적창구(3차 추가지원): 20개 단체 27억 7,681만원 - 밀가루 2,746톤, 옥수수 3,015톤, 분유 42톤, 설탕 165톤, 씨감자 150톤, 의약품, 의류 등 ○ 독자창구(2.10~): 9개 단체 43억 2,363만원 - 북한동포후원연합회: 의류 2,027상자, 밀가루 1,000톤, 비료100톤, 분무기 1,000대, 삽 5,000개(10억 7,094만원) - 유진벨: X-Ray차 1대, 초음파진단기 4세트, 결핵치료장비, 영양제 등(11억 8,564만원) - 한국이웃사랑회: 우유멸균탱크 2대, 크립분리기, 수의약품 등(3,285만원) - 한국JTS: 비료 384톤, 치과 의료장비, 설탕 42톤, 분유 20톤 등(2억 8,931만원) - 월드비전: 의약품, 온실자재, 씨감자 1.5톤 등(2억 7,737만원)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의류, 의약품, 옥수수 1,000톤, 젓염소 450두 등 (11억 9,221만원) - 한국로타리총재단 : 앰블란스 2대, 의약품(4,031만원) - 국제옥수수재단 : 씨감자 10종 (100만원) * 협력사업 14억원 별도 -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비료 1,000톤(2억 3,400만원)  * 1\$당 1,200원 환율 적용
국 제	UN 기구	20,263	- 미국 1억 7,500만불(추정), EU 798만불, 스웨덴 383만불, 캐나다 340만불, 호주 270만불, 노르웨이 200만불, 덴마크 195만불, 핀란드 72불, 아일랜드 27만불 등 - 실적/목표 38%
	국제적 십자사	420	- 실적/목표 46%
	개별 국가	15,100	- EU 3,740만불('99.3 합의, 이월분 440만불 포함), 미국 3,200만불(식량 10만톤+감자재배사업), 스위스 300만불, 중국 7,860만불(식량 15만톤+코코스 40만톤)
	NGO	72	- NRC, VIVA 등

## 다. 이산가족문제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북한당국의 태도는 1999년도에도 변하지 않았다. 북한은 그간 이산가족을 북한체제를 배반하여 월남한 자들의 잔류가족으로 인식하고 적대정책을 취해 왔다. 또한 이산가족의 재회와 교류가 가져올 외부정보의 유입을 우려하여 이산가족문제 거론을 기피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이산가족문제를 대북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선정, 이산가족 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이산가족문제를 경제적 지원문제와 연계시키려는 북한의 의도를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한 남북차관급회담이 1998년 이어 1999년에도 개최되었다.

1998년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차관급회담(4.11~17)은 상호 입장차이로 성과 없이 결렬되었다. 남측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북한 식량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비료를 지원하는 대신 북측이 상응하는 조치로서 최소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시기라도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반하여 북측은 비료지원이 이루어진 후 이산가족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선(先) 비료지원, 후(後) 이산가족문제 논의’를 주장하였다.

정부는 남북차관급회담 개최에 앞서 북한과의 비공개접촉(6.3)을 통해 선 비료지원 후 이산가족문제 논의라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먼저 비료 20만톤을 지원하되 10만톤을 지원한 후 이산가족문제를 남북차관급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남한 정부가 비료 10만톤을 먼저 지원하여 약속을 이행하였지만, 결국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차관급 제1차 회담(6.22~26)에서 남한 정부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우선 협의할 것을 북한당국에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서해사태'와 '황장엽 인터뷰' 등을 거론하면서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였다. 특히 북한은 서해사태로 남북한관계가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차 회담(7.1~3)에서는 "남측이 잔여 비료 수송계획을 알리고 배를 띄우면 이산가족문제 토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북한은 이산가족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나머지 비료 10만톤의 선 지원을 요구하였다.

1999년도에도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교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민간차원에서의 이산가족 상봉이나 교류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되었다.

1990년부터 1999년 11월 31일까지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교류로는 생사확인 1,852건, 서신교환 5,111건, 제3국 상봉 444건이 성사되었다. 1998년에 비하여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제3국 상봉 또한 1998년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Ⅲ-5-3> 참조).

<표 Ⅲ-5-3>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교류 연도별 성사확인

연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계
생사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41	377	461	1,852
서신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644	469	595	5,111
3국상봉	6	11	19	12	11	17	18	55	108	181	444

정부는 신고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고령 이산가족 등에 대한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절차에 관한 지침」을 시행('98.9.1)한 이후, 이산가족의 교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남북이산가족교류를 위한 절차 간소화 지침」을 제정(5.25),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산가족 방북 사례가 1998년 이후 5건에 불과하였다. 앞으로 그 숫자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확한 집계는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산가족 기업인의 방북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산가족들의 인간적 고통 경감과 이산가족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는 민간차원 이산가족교류(제3국을 통한 간접교류)를 측면 지원하였다. 보다 많은 이산가족들이 재북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제3국에서의 상봉을 실현할 수 있도록 민간교류체제의 정착이 모색되었다.

정부는 「이산가족교류경비에 관한 지침」('98.12.15)을 마련하여 제3국에서의 이산가족교류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였다. 이 지침에 따라 재북가족의 주소·생사를 확인하거나 상봉하려는 이산가족에게 일정한 경비를 지원하였다. 원칙적으로 생사·주소 확인시에는 40만원, 그리고 상봉시에는 80만원의 경비를 지원하되, 생활보호대상자, 미송환 국군포로 가족 등 특별지원 대상자에게는 두 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이 지침에 따라 ①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이산가족교류 주선단체와 ② 기타 이산가족교류 촉진 기여자(「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 언론·방송사 등)들이 교류실적에 따라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이같은 이산가족교류 경비의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지원 1차 연도인 1998년에 1억 2,3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였고, 1999년도에는 그 액수를 3억원으로 증가시켰다.

정부는 2000년에도 가능한 한 이산가족교류 지원을 위한 예산을 계속 증액하여 제3국을 통한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이산가족 상봉정책에 힘입어 2000년에도 제3국과 방북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남북차관급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의 돌파구가 열려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편지왕래, 시범적 상봉 등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산가족문제를 정치문제로 보고 외부정보 유입을 우려하는 북한의 기존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당국간 제도화를 통한 대규모 상봉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라. 미송환 국군포로

한국전쟁 기간중 북한에 억류되어 귀환하지 못한 미송환 국군포로의 수는, 국방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1만 9,000여명에 달한다. 남한 정부는 11차례('53.9.9~64.12.14)에 걸쳐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측에 국군포로의 송환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측은 이를 거부하였다. 미송환된 국군포로들은 북한에 억류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비참한 생활을 하여 왔다. 그 결과 대부분 국군포로들은 중병이나 영양실조로 사망하였으며, 생존한 국군포로들은 감시대상으로 분류되어 각종 차별을 받으며 생활하여 왔다.

미송환 국군포로들의 실태는 탈북·귀환한 국군포로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 1999년 말까지 귀환한 국군포로는 모두 8명이며, 1999년에만 손재술('99.3), 허관영('99.5), 박홍길('99.11) 등 3명이 귀환하였다. 그간 조창호('94.10)를 비롯하여 양순용('97.12), 장무환('98.9),

김복기·박동일('98.12)이 귀환하였다. 1999년 9월말 현재, 정부가 신원을 확인하여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미송환 생존 국군포로의 수는 모두 244명이다. 이러한 숫자는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과 귀환 국군포로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집계된 것이다.

정부는 귀환 국군포로들에 대한 정착금 및 주거지원을 위해 「국군포로 등의 대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1.29)하였다. 이는 귀환 국군포로들의 생계기반 마련 및 자립지원을 위한 조치이다.

북한은 1999년도에도 여전히 미송환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포로 송환에 관한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접촉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오히려 북한은 김인서, 김영태, 함세환 등 출소공산주의자들을 전쟁포로라고 강변하면서 이들의 무조건 송환을 요구하였다. 북한은 북한적십자사, '남조선 비전향장기수 구원대책 조선위원회' 등의 명의로 대한적십자사, 유엔인권위원회와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 등에 이들의 복송을 요구하는 서한을 지속적으로 보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2.24)과 3.1절 기념사를 통해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국군포로·남북자와 출소공산주의자의 맞송환을 위한 남북 당국간의 대화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상호주의, '장사꾼의 논리'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앞으로도 북한은 국군포로 및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회색시키기 위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출소공산주의자들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한국은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유엔인권위원회나 국제적십자사 등 관련 국제기구의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국제사면위원회 등 국제인권단체들과의 연계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군사정전위원회나, 장성급대화, 4자회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군포로문제를 거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6.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 관계

1999년 남북한은 각종 국제회의나 국제기구 등에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상호 입장이 대립·갈등하는 양상이 지속되거나 직접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협력관계를 구축하지는 못하였다.

국제무대에서 국제연합(UN)은 남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조우하는 핵심적인 무대이다. 북한은 제54차 UN총회를 앞두고 21개 부의장국 중 아시아지역에 배정된 5개 UN총회의 부의장국의 하나로 선출(9.15)되었다. 그러나 1999년 UN총회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남북한의 입장은 상충되었다. 다만 북한은 예년과는 달리 UN총회무대를 적극적인 외교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남한의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은 UN총회연설(9.30)에서 냉전의 마지막 유산인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흡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한민족의 공존공영을 증진하고자 하는 협력정책”이며 “통일로 이르는 과정에서 두 체제의 공존을 추구하는 관용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남한의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또한 북한 당국에 대하여 수많은 북한주민의 먹을 권리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여 국제사회의 도움을 계속 확보할 것을 권유하고, 남한 정부가 북한의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

언' 이행을 위해 남한과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반면, 백남순 북한 외무상은 UN총회연설(9.25)에서 남한의 포용정책이 “북한의 제도를 변화시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흡수시키려는 모략으로 현 당국자들도 현재의 정책이 이전에 소련을 붕괴시킨 미국의 평화이행전략과 같은 것이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은 (고려)연방제를 통해 실현되어야 하며 북·미 평화협정 체결, 유엔사령부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등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다만 백남순 외무상은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미국을 겨냥하여 백남순 외무상은 “한반도가 제2의 발칸반도가 되리라는 것은 이미 가설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발칸반도에서는 인도주의문제가 전쟁의 구실이 되었다면 한반도에서는 미사일문제가 그 구실로 이용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북·미 현안 해결을 위해 고위급회담을 진행하고 이 회담기간에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으로써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하고, 미국의 관계개선 노력에 “신의있게 호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백남순 북한 외무상은 UN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탈리아, 스위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국가들과 활발하게 접촉을 전개하였다. 백남순 외무상은 이들 국가의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설명하고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미사일문제에 대해서는 ‘자주권 문제’라는 북한의 입장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미국의 소리’(VOA)방송과의 회견(9.27)에서 남한측의 대북자세 전환을 전제로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핵안전조치 불이행문제는 1999년에도 IAEA에서 중요 사안

으로 다루어졌다. IAEA 이사회(6.7~11, 비엔나)는 북한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 상황을 설명하는 언론발표문과 북한으로 하여금 IAEA 안전조치협정을 전면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의장요약문을 채택하였다. 남한은 2000년 NPT 평가회의를 위한 3차 준비회의(5.10~21, 뉴욕)에서 많은 국가들이 2000년 평가회의를 통해 북한의 안전조치협정상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점을 상기시키고, 북한의 핵관련 활동 재발방지를 위해서 IAEA의 지속적 감시가 긴급요를 강조하였다.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독일(EU 15개국 및 중·동구 12개국 대표) 등은 북한이 조속한 시일내에 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하고, 과거 정보보존 조치 등 IAEA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다. 제54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는 북한 핵문제 관련 조항이 포함된 IAEA 보고서 결의가 찬성 122, 반대 1(북한), 기권 6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채택(11.15)되었다.

그리고 남북한이 UN 산하 기구가 주최하는 국제회의 등에서 조우할 기회가 있었다. 북한은 정성일 외무성 군축과장 등 2명의 대표를 UN 아태평화군축센터 주관 군축회의(3.18~20, 카투만두)에 파견하였다. 동 회의에서 북한 대표들은 고려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등이 동아시아 안보에 기여할 것이며 미사일 문제는 '자주권'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남북한 대표들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9월에는 도쿄에서 아태지역의 비공식적 다자안보대화 협의체인 아태지역안보협력회의(CSCAP)가 열렸으나, 북한은 약속과는 달리 참석하지 않았다. 이 회의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문제와 페리보고서에 대한 대응문제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밖에도 제101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4.11~16, 브라셀),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 제55차 총회(4.22~23, 방콕), 세계보건기

구(WHO) 제52차 총회(5.17~28, 제네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사회(6.14~25, 제네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제30차 총회(11.9~23, 로마),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제8차 총회(11.29~12.3, 비엔나) 등 여러 국제회의에 남북한의 대표들이 참여하였으나, 대표단간의 조우에서 북한측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특별한 갈등 또는 협력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북한은 FAO 총회, UNIDO 총회 등 경제 관련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전례없는 자연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홍보도 빠뜨리지 않았다. UNIDO 총회에서 북한 대표는 북한의 공업화를 위해 개발도상국가들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세계화'를 강요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국제무대에서 민간 차원의 남북접촉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학술분야에서는 중국 연변대학 창립 50주년을 기념한 남·북·중국 국제학술회의가 "새 천년을 향한 조선족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하에 연변대학(7.22~24)에서 열렸다. 동 회의에는 북한측에서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최진혁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8명의 학자가 참여하였으며, 남한측에서는 통일연구원 연구진을 비롯하여 17명의 학자가 참여하여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민족문제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가졌다. 그리고 1995년부터 남한 한국통일포럼과 북한 사회정치학회에 의해 연례적으로 공동 개최되고 있는 남·북·해의학자 통일회의 5차 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10.26~27). 체육분야에서는 중국 톈진에서 열린 제34회 세계체조선수권대회(10.16)에 남북한 대표들이 참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또한 남북한, 중국, 일본의 고위 축구관계자들이 협의를 통해 2000년도 8월에 극동 4국간 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12.6).

1999년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경제관련 국제기구 회의에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북한 대표단은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에 감사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계속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UN총회에 참여한 백남순 외무상이 유럽국가들 중심으로 여러 나라의 외무장관들과의 접촉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북한은 안보관련 국제회의에는 아직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참여를 하더라도 북한의 입장만을 적극 홍보하려는 자세를 견지하였다. 따라서 국제무대에서 남북한간의 접촉은 아직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특별하게 남북한간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는 않았다.

2000년에는 북한이 대미·일관계 개선정책의 바탕위에서 유럽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유럽국가들도 미·일의 대북관계 개선에 발맞추어 대북접촉을 확대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다만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문제와 관련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여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접근도 영향을 받을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활동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북한은 2000년에도 WFP, FAO, UNIDO 등 경제관련 국제기구 회의를 비롯하여 비정부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한 식량의 추가 확보 및 경제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남한정부도 북한의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을 적극 환영하고 있으므로 남북한간 제한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학술, 체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제3국을 통한 남북한의 교류와 접촉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2000년에도 유엔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고려연방제 및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홍보하고, 미·북 평화협정 체결,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남한과의 입장 대립은 지속될 것이다.

## <부록> 1999년도 주요 사건일지

- 1. 1 북한, 「당보, 군보, 청년보」 공동사설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 발표
- 1. 4 북한, 김대중 대통령 신년사 비난
- 1.11 김정일, 과학원 현지지도
- 1.13 노농적위대 창건 40돌 기념 중앙보고회 개최
- 1.14~15 전국농업부문일꾼열성자회의
- 1.15 현대 금강산사업 승인
- 1.15 제3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개최
- 1.16~24 북·미, 금창리사찰 관련 3차 협상
  - 북한, 식량 100만톤 지원 요구
- 1.19 김정일, 태천수력발전종합기업소 현지지도 보도
- 1.19~22 4자회담 4차 본회담
- 1.20 김정일, 최현군관학교 시찰 보도
- 1.21 중국 지원 원유 8만톤 전량 납입 보도
- 1.22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
- 1.26 북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실시 공고
- 1.26~27 전국 근로단체 사상사업부문 일꾼회의
- 2. 3 북한, 정부·정당·단체연합회의 개최 및 대남편지 발송
  - 하반기 남북고위급정치회담 개최 제의
  - 남한측 각계인사 150명에 대남 편지 발송
- 2. 3 농근맹 중앙위 제35차 전원회의 개최
- 2. 4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제2차 전원회의 개최

- 2. 5 김용순 아태평화위원장,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일행과 면담
- 2. 8 북한 여자축구선수 김순희, 미국 국가종합여자축구선수단과의 경기 참가기 위해 방미
- 2. 9 김정일,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615군부대 시찰
- 2.10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허용
- 2.15 김정일 57회 생일 경축 중앙보고대회
- 2.16 김정일 생일 관련 각종 경축행사 진행
- 2.24~27 주룽지(朱鎔基) 중국총리 방미
- 2.25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8기 제16차 전원회의
- 2.26 미 국무부, 「'98 세계인권보고서」 발표
- 2.27~28 인민군 중대장대회
- 2.27~3.16 북·미, 금창리사찰 관련 4차 협상
- 2.27 북·중, 1999~2000년 문화교류계획서 조인
- 3. 3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도시경영성과 국토환경보호성 분리 성명
- 3. 6~9 일본 자민당 소속 중의원 의원 일행 방북
- 3. 7 북한 지방 대의원 선거
  - 중앙선거지도위, 99.9% 참가, 100% 찬성투표 발표
  - 2만 9,442명의 대의원 선출
- 3. 9 국가정보원, 휴전이후 납북억류자 454명 명단과 미교환 국군포로 231명 생존 발표
- 3. 9~11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일행 방북
  - 금강산 및 서해안공단 개발문제 협의
- 3.10 김정일, 인민군 제720군부대 및 동부전선 지혜산 일대 방어 군부대 방문

- 3.15~17 카라신 러시아 외무차관 방북
  - 북·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가조인
- 3.16 미·북, 금창리협상 타결
- 3.16 전국 경제선동부문 열성자회의
- 3.16~21 일본 참의원 의원 일행 방북
- 3.20 한·일 정상회담
- 3.24 NATO군, 유고공습 단행
- 3.25 국제옥수수재단 농업협력사업 승인
- 3.25~26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
- 3.39 김정일, 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 지휘부 시찰
- 3.29~30 제4차 북·미 미사일회담(평양)
- 3.30 김정일, 함경남북도 공업부문 사업 현지도
- 4. 2~7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방미
- 4. 5 김정일, 인민군 제567대연합부대 지휘부 시찰
- 4. 3~6 유럽의회 의원 일행 방북
- 4. 7~9 최고인민회의 제10기 2차 회의
  - 「인민경제계획법」 전문 발표
- 4. 8~15 주룽지 중국총리 방미
- 4. 9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6돌맞이 중앙보고대회
- 4.13 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14호 하달
  - 79명의 장성급 승진 인사
- 4.14 김일성 87회 생일 경축 중앙보고대회
- 4.14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 55차 회의에서 북한대표 연설
- 4.15 김정일, 재일동포 자녀에게 교육원조비·장학금 전달
- 4.23 김정일, 조총련 제1부의장 서만술과 면담
- 4.24 인민군 창건 67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 4.24~25 한·미·일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 4.24~27 4자회담 5차 회의
- 4.25 김정일,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 4.25 김정일, 군부대 방문 및 군 공훈합창단 경축공연 참관
- 4.25 「로동신문」, “백두의 혈통을 이어받은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이다” 보도
- 4.27 민주노총 대표 방북  
- 민주노총·직총, 남북노동자축구대회 개최 합의
- 4.29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기구 발족
- 4.29 위무성 대변인, 일본의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관련 3개 법안 통과 관련 담화
- 5. 1 5.1절 109돌 기념보고회 개최
- 5. 5 김대중 대통령, 미국 CNN 회견
- 5. 5 김정일, 인민군 제287군부대 전방지휘소 시찰
- 5. 6 김정일, 인민경비대 제1216부대 양어장 시찰
- 5. 7 김정일, 강원도 농촌기계화 사업 현지지도
- 5. 8 NATO군, 유고주재 중국대사관 폭격
- 5. 8 김정일, 4.25예술영화촬영소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경희극 ‘동지’ 관람
- 5.10~21 NPT 평가회의를 위한 3차 준비회의
- 5.11 김정일, 인민군 금성친위대 제959고사포병군부대 시찰
- 5.18 김정일, 탱크자동차병 군관학교 시찰
- 5.18~5.25 김명기·은희곤 목사 등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부연회 대표단 방북
- 5.19 김정일, 군부대 군인가족 예술소조 공연 관람
- 5.19~21 범청학련 제9차 공동의장단 회의

- 5.20~24 미국, 금창리 지하시설 현장조사
- 5.22 미국, 북한에 식량 40만톤 지원 결정 발표
- 5.25 「남북이산가족교류를 위한 절차간소화 지침」 제정
- 5.25 미국, 「콕스보고서」 공개
- 5.25~28 페리 미 대통령 특사 방북  
- 김영남과 담화(5.26), 최태복·강석주·이상우 등 배석
- 5.25~6. 1 지선·명진스님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민족화합  
불교추진위원회 방북
- 5.25 일본 민주당소속 중의원 일행 방북
- 5.27 미·일신방위협력지침 관련 3개 법안 일본 참의원 통과
- 5.27~30 김대중 대통령 방러
- 5.28 「로동신문」, 정론 “강성대국 건설의 핵심부대” 보도  
- “조선노동계급은 강성대국 건설의 핵심부대”
- 5.31 김정일, 군부대 시찰 및 군 예술소조 공연 관람
6. 1 북한 여자축구선수단, 제3차 세계여자축구선수권대회  
참가차 미국 향발
6. 3 20만톤 비료 북측에 제공하기로 합의
6. 3~7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중  
- 홍성남·김일철·최태복·백남순·유미영·박동춘 등 동행  
- 강택민·이봉(6.3) 등과 면담
6. 7 중국 외교부 군축담당관 방한  
- 한·중간 최초의 군축·비확산회담
6. 7~11 IAEA 이사회
- 6.11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 분과위원회」 제3  
차 회의 개최 및 의정서 조인
- 6.12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8기 제17차 전원회의

- 6.15 서해교전사태 발생
- 6.15 삼성그룹 대북 경험단 방북
- 6.15 나진·선봉 국제통신센터 착공식
- 6.15, 6.22, 판문점 장성급회담
  - 7. 2 - 서해사태 문제와 함께 Y2K 문제 논의
- 6.16 유럽연합, 북한에 400만 유로(약 41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 제공 결정
- 6.16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 “우리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보도
- 6.16~27 한국 군사사절단 방북
- 6.1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북한 경수로 건설과정상의 안전관리를 맡는다고 발표
- 6.19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 서해교전사건 관련 성명
- 6.19 김일성의 당사업 개시 35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 6.20 G8(선진 7개국 + 러시아) 정상회담
- 6.20~25 북한,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씨 억류
- 6.22~26 제1차 남북차관급회담
- 6.23~24 북·미 고위급회담
- 7. 1~3 제2차 남북차관급회담
  - 전체회의 1회, 수석대표 단독접촉 2회
- 7. 3 한·미 정상회담
- 7. 8 김일성 사망 5주기 중앙추모대회
- 7. 8 오부치 일본총리 방중
- 7. 9 WFP/FAO, 대북식량지원 확대 촉구 성명 발표
- 7.10 김형직출생 105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 7.15 일본·KEDO, 차관공여협정 발효

- 7.20~24 국제원자력기구 대표단 방북
- 7.21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
- 7.22~24 남북한·중국 국제학술회의
- 7.25~29 제5차 남북청년학생 통일세미나
- 7.26 아세안지역포럼(ARF) 의장성명 발표
- 7.27 한·미·일 외무장관회담
- 7.28 코언 미 국방장관, 오부치 일본총리와 면담
- 7.30 현대-아태, 관광세칙 및 신변안전보장 합의
- 8. 3~4 북·미 고위급회담
- 8. 5 금강산관광 재개
- 8. 5 북한중앙방송, 집중호우와 태풍 '올가'의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
- 8. 5~9 4자회담 6차 본회담
- 8. 5~10 WFP 사무총장 일행 방북
- 8. 9 일본의회, 일장기와 기미가요 관련 법안 확정
- 8.10 한국전력 경수로 건설지원사업 승인
- 8.11 북·일관계 관련, '정부성명' 발표
- 8.11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 8.10~14 민주노총 방북
  - 남북노동자추구대회(12~13)
- 8.13~15 '99 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
- 8.13~16 제4차 우리말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연변)
- 8.19 한국·KEDO, 차관공여협정 발효
- 8.23~29 조성태 국방장관 방중
- 8.25 중·러 정상회의

- 8.26~27 여맹 제5기 31차 전원회의
- 8.26~29 토니 홀 미 하원의원 방북
- 8.28~9. 8 러시아 군사사절단 방한
- 8.29 북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마라톤 우승
- 8.31 오부치 일본총리 방러
- 8.31~9. 7 미술계 권옥연(예술원 회원) 등 11명 방북
- 9. 2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북방한계선 무효화' 선언
- 9. 3 한·러, 「2000~2001년 군사분야 교류의정서」 체결
- 9. 7~12 북·미 고위급회담
- 9. 8 정권창건 51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 9.12~13 APEC 정상회의
  - 한·미·일 정상회담(9.12)
- 9.15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 미 대통령과 의회에 대북정책 권고안 제출
- 9.15 북한, 제54차 유엔총회에서 부의장국으로 선출
- 9.17 미국,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
- 9.22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 김대중 대통령 면담
- 9.22 김정숙 사망 50돌 관련 중앙추모대회
- 9.22~24 김정일, 함경남도 공업부문 사업 현지도
- 9.25 백남순 북한 외무상, 제54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
  - 미사일발사 유예 공식 언명
- 9.27 백남순 북한 외무상, 미외교관계협의회(CFR)에서 연설
  - “남한이 7·4공동성명 3대 원칙을 존중하고 북한의 협상제의에 응한다면, 정상회담도 진행될 수 있다”
- 9.27~10. 1 현대 농구대표단 방북
  - 남북통일농구대회(9.28~29)

- 9.29 평양실내종합체육관 착공식
- 9.29~30 청년동맹 모범 초급일꾼대회
- 9.30~10. 1 청년동맹 전국 분주소장회의 개최
- 10. 1 김정일,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과 면담  
- 서해안 경제특구 개발 합의
- 10. 5 당가선 중국 외교부장 방북  
- 북·중 외교수립 50돌 행사 참가
- 10. 6 김정일, 군부대 시찰 및 군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 10. 8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추대 2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 10.10 김정일, 인민군 공훈합창단 경축공연 관람
- 10.12 김정일, 인민군 제1130군부대 섬방어대 시찰
- 10.17 김정일, 군부대 시찰 및 군 예술소품 공연 관람
- 10.18~20 북·일 외교당국자 싱가포르에서 비밀접촉
- 10.21 일본, 경수로사업 재정분담 서명
- 10.22 북한 위성TV방송 국내시청 허용
- 10.25 미 국방부, 미군유해 평양에서 직접 인수
- 10.26~27 남북한·해외학자 통일회의 5차 회의(북경)
- 10.27 북한-현대, 금강산 관광·개발 30년 독점사용권 협약
- 10.27 북·러, 국경실사작업 실시 합의
- 10.29 담배인삼공사-광명성총회사, 담배 공동생산·판매 합의
- 10.30 청년동맹 제18차 전원회의 개최
- 11. 2 일본, 북·일간 전세기운항 동결조치 해제 발표
- 11. 3 미 공화당, 페리보고서 대응 대북정책보고서 발간
- 11. 3 북한, 「체육성」을 「내각체육지도위원회」로 개편
- 11. 3~4 제2의 천리마대진군 선구자대회 개최
- 11.15~17 각 시·도별 제2의 천리마대진군 선구자회의 개최

- 11.15~18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 겸 국제축구연맹(FIFA) 부의  
원장 방북
- 11.15~19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위한 베를린회담
- 11.16 북한, '99년도 곡물생산량 428만톤으로 발표
- 11.18 OSCE 정상회의 개최
- 11.18 김정일, 군부대 시찰 및 군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 11.23 제3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 11.28 김정일, 군부대 시찰 및 군 예술소조 공연 관람
- 12. 1~3 일본 초당파 방북단 방북
- 12. 5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  
- 로저 클린턴과 한국가수들 참여
- 12. 6 극동4국(남북한·중국·일본) 축구대회(2000.8) 개최
- 12. 9~10 옐친 러시아대통령 방중
- 12.12 김정일, 용연군 종합농장 용정분장 현지지도
- 12.14 일본, '98 미사일발사 이후 대북 제재조치 해제
- 12.15 KEDO·한국전력, '주계약' 체결
- 12.19 러시아 총선
- 12.20 북·일 수교협상 지위 격상
- 12.20 중국, 마카오주권 회복
- 12.23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8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 12.23 김정일, 인민군 제488부대 시찰
- 12.24 김정일, 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공연 관람
- 12.22~25 아·태평화위 농구대표단(단장: 송호경) 서울 방문  
- 조선중앙TV 통일농구경기 녹화중계(12.25~26)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김영춘·신상진의 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안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김영운·이우영	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정영태·오승렬의	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이헌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흙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손기웅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배정호·신상진·조한범 공저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지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제 정영태 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지	5,500원
97-22	북한 장애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윤 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헌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의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김병로·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0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함의	이교덕	저	4,500원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의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군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5,500원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태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 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춘흠	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4,000원
98-21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북·일관계정상화와 남북한관계	김영춘	저	3,500원
98-2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재고전략: 점진적·포괄적 구상	전성훈	저	7,500원
98-23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이현경	저	5,000원
99-01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제성호	저	5,000원
99-02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이금순	저	5,000원
99-03	한반도의 비핵화실현과 남북한·일본 3국비핵지대창설	전성훈	저	6,000원
99-04	탈냉전기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배정호	저	6,500원
99-05	남북 경제교류·협력 발전방안 연구: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대책	김규륜	저	5,500원
99-06	북한의 인사행정	최진욱	저	4,500원
99-07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구동독 지역 적용에 관한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b>■ 북한인권백서</b>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옥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송정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7	김병로·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송정호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8	최의철·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9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9.90
북한인권백서 2000	제성호·최의철·서재진의 공저	7,000원
<b>■ 연례정세보고서</b>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98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5,000원
99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9~2000		6,500원
<b>■ 학술회의 총서</b>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99-0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5,500원
99-0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7,000원
99-03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6,500원
99-04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방향	5,500원
99-05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5,000원
<b>■ 통일문화시리즈</b>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b>■ 논총</b>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8권 1호 (1999)	7,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7 (1998)	8,000원
<b>■ Translation Series</b>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b>■ 기타</b>	
북한의 위기상황인식에 관한 연구	목정균 저 5,500원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ku.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증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5) 본원 홈페이지에서 모든 발간물에 대한 초록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1997년 이후 발간물은 원문을 온라인 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관회원의 경우 담당자 1인만 가능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9~2000

인쇄/1999년 12월 28일

발행/1999년 12월 31일

발행처/통일연구원

발행인/곽태환

편집인/국제관계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7 팩시밀리 901-2543

© 통일연구원, 199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 734-6818 · 사무실 : 394-0337

---

ISBN 89-87509-85-0

6,500원